

2020.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

활동결과 보고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제출)함.

	위원장	채평석	
	부위원장	박용희	
	위원	박성수	
	위원	손인수	
	위원	손현옥	
	위원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장 귀하

목 차

I . 인사말(특위활동을 마무리하면서)	1
II . 특별위원회 구성	5
1. 구성 목적	7
2. 구성 경위	7
3. 구성 개요	8
III .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및 성과	17
1. 활동 개요	19
2. 특별위원회 회의 및 홍보	25
3. 특별위원회·市·시민단체 공조활동	41
4. 결의안 발의	55
1)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57
2)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61
◇ 성명서 발표	65
1) 국회 용역결과 이행 촉구 성명서	65
2) 행정수도완성 정책의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67
3) 행정수도완성 정책의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21대 국회에 바란다」 성명서	70
5. 사진으로 보는 특별위원회 활동	75
IV . 참고자료	101
1. 언론 보도자료	103
2.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	173



I.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채 평 석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채평석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공약을 내건 이래,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수정안 논란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2년 7월, 17번째 광역 자치단체로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당시 10만 명이었던 인구는 2020년 6월 현재 35만명을 넘어섰고, 그동안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는 등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세종시가 국가 행정의 구심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있어, 행정과 정치의 이원화로 인한 국정 운영의 비효율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며,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국회와 행정부의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이동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교류를 통해 국정운영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의회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집행부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행정수도완성 정책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민단체와 함께 다양한 공조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 세종시법 개정안, 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정치권의 대립과 여러 현안에 밀려 폐기된 점은 아쉽음으로 남지만,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홍성국 국회의원을 필두로 8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이 실현되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될 때까지 35만 세종시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용희 부위원장님, 박성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님, 손현옥 위원님, 임채성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와 공조활동을 펼친 지방분권 세종회의 관계자 분들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춘희 세종시장님,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6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채평석



II. 특별위원회 구성

1. 구성 목적
2. 구성 경위
3. 구성 개요

1 구성 목적

- 세종시는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공공기관 등이 이전했고, 약 1만 9,0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8. 11월 특위 구성 당시 현황으로, 2020. 4월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도 완료되었음

-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실질적이고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설치를 촉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구성 경 위

- 2018. 11.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권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안하여, 2018. 11. 12.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

- 또한, 2018. 11. 12.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위원 7인이 선임됨

3 구 성 개 요

1) 명 칭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2) 구성 현황

- 위 원 장 : 채평석 의원*
- 부위원장 : 박용희 의원
- 위 원 : 박성수 의원, 손인수 의원, 손현옥 의원,
임채성 의원
- ▶ 업무지원 : 행정복지전문위원실

* 특위 위원장 재선출

- 구성 당시 위원장 : 윤형권
- 재선출 사유 : 윤형권 위원장이 의원직을 사퇴('20.1.8.)함에 따라,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1.22.) 개최를 통해 채평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

3) 활동기간**

- 2018. 11. 12. ~ 2020. 6. 30일까지

**** 활동기간 연장**

- 구성 당시 활동기간 : 2018. 11. 12. ~ 2019. 12. 31
- 연장 사유 :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현안과제들의 추진을 촉구하고, 제3대 후반기 원 구성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

4) 추진목표

-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각종 위원회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노력
- 시민단체·의회·市 집행부 공조체계 구축 및 지원근거 마련
- 개헌 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추진

5) 활동방향

- 행정수도완성 관련 집행부 추진상황 점검 및 현황 청취
-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추진
- 시민단체·의회·市 집행부 등과 공조체계 마련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위한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 주요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5) 위원 명단

※ 2020. 6월 현재

직 위	성 명	위원회별	비 고
계	6명		
위원장	채평석		행정복지
부위원장	박용희		교육안전
위원	박성수		교육안전
위원	손인수		산업건설
위원	손현옥		교육안전
위원	임채성		교육안전

구성 결의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형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2
----------	------

발의연월일 : 2018. 11. 2.

발 의 자 : 윤형권, 채평석, 노종용
박성수, 손인수, 임채성
박용희, 손현옥, 이윤희

1. 제안이유

- 세종시는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했고, 약 1만 9,0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실질적이고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설치를 촉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구성목적 :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기 위함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 2019. 12. 31.
- 위 원 수 : 의장을 제외한 7명 이하
- 전문위원 지정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

3. 세부 활동계획

- 특별위원회에서 수립 의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

심사 보고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32

2018년 11월 12일

의회 운영 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1. 2.

나. 발 의 자 : 윤형권 의원 외 8명

(윤형권, 채평석, 노종용, 박성수, 손인수, 임채성,
박용희, 손현옥, 이윤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5.

라. 상정일자 : 2018. 11. 12.

마. 의결일자 : 2018. 11. 12.

-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바. 의결결과 : 수정가결

2. 제안 이유

○ 세종시는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했고, 약 1만 9,0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실질적이고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를 촉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구성목적 :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기 위함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 2019. 12. 31.
- 위 원 수 : 의장을 제외한 7명
- 전문위원 지정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
- 세부 활동계획 : 특별위원회에서 수립 의결

4. 참고 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제1항 및 제2항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전문위원) 제2항

5. 검토 의견

- 특위의 구성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수개의 상임위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특위 구성결의안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18년도 위원 선임

일로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위원의 수는 의장을 제외한 7인 이하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 구성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 지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을 참고하여 협의·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로 수정함.
- ※ 전문위원 지정 : 행정복지전문위원 협의 결정

9. 소수의견 : 없음

- (윤형권 위원) 본 특별위원회를 보좌할 행정복지전문위원실에 담당 인력 1명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 요구.

10. 기타사항 : 없음

11. 첨부서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붙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특별위원회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 특별
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로 한다.



Ⅲ.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및 성과

- 1. 활동 개요**
- 2. 특별위원회 회의 및 홍보**
- 3. 특별위원회·市·시민단체 공조활동**
- 4. 결의안 발의 · 성명서 발표**
- 5. 사진으로 보는 특별위원회 활동**



1. 활동 개요

1 활동 개요

1 특별위원회 회의 및 홍보 활동 등 : 11회

□ 특위 회의 : 5회

○ '18. 12. 31.(월) :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 윤형권(위원장), 박용희(부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손현옥, 임채성, 채평석

○ '19. 1. 25.(금) :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 및 市 집행부 행정수도 완성 추진계획 보고·청취

○ '19. 12. 4.(수)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채택 및 市 집행부 행정수도 완성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청취

○ '20. 1. 22.(수)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 윤형권 위원장의 의원직 사퇴('20.1.8.)에 따라 채평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새로 선출

○ '20. 6. 22.(월) : 市 집행부 행정수도 완성 추진현황 보고·청취 및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 자문 회의 : 2회

○ '19. 8. 16.(금) : 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식 개최

○ '19. 11. 5.(화) : 특별위원회 자문단 간담회 개최

□ 홍보 : 4회

○ '19. 2. 14.(수) : 특별위원회 활동 홍보를 위한 세종시기자협의회 간담회

○ '19. 2. 26.(화) : 특별위원회 활동 홍보를 위한 세종시출입기자단 간담회

- '19. 8. 13.(화) :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 용역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입장 발표
- '19. 11. 28.(목) : '20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2 市 집행부·시민단체 연석회의 등 공조 활동 : 9회

- '19. 3. 28.(목) : 세종연구실 워크숍 「행정수도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과제」 토의 참여
- '19. 4. 15.(월) :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연계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 추진
- '19. 5. 29.(수) :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연석회의 참여
- '19. 8. 16.(금) :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간담회 개최
- '19. 9. 20.(금)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 참여
- '19. 11. 6.(수)
 -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건립 추진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국회사무처 및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에 국회의사당 조속한 건립 추진 건의자료 전달
- '19. 12. 9.(금) : 충청권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참여
- '20. 5. 7.(목) :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행사 연계 '행정수도완성 촉구결의' 참여

3 결의안 발의, 성명서 발표 : 5회

□ 결의문 : 2회

- '19.3.22(금)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
- '19.11.13(수)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

□ 성명서 : 3회

- '19.8.22(목) :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 '20.3.30(월) :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 '20.6.1(월) :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21대 국회에 바란다』 성명서 발표



2. 특별위원회 회의 및 홍보

2

특별위원회 회의 및 홍보

1

특별위원회 회의(제1차)

□ 개요

- (일 시) 2018. 12. 31.(월) 10:00
-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5층 / 504호)
- (참석자) 특별위원회 선임 위원(7명)
- (안 건)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제2차 회의 일정 협의(회의 종료 후)
- (임시 위원장) 윤형권 의원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추진 개요

- 2018. 11. 2.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대표 윤형권 의원)
- 2018. 11. 12. : 제5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수정)
- 2018. 11. 12. : 제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 및 위원* 선임

* 7명 : 윤형권, 채평석, 박성수, 손인수, 임채성, 박용희, 손현욱

□ 회의 결과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구 분	성 명	소속 정당	비고
위원장	윤형권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박용희	미래통합당	

- 제2차 회의 일정 협의
 - (일 자) '19. 1. 25.(금) 14:00
 - (안 건)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
市 집행부 행정수도완성 추진계획 보고·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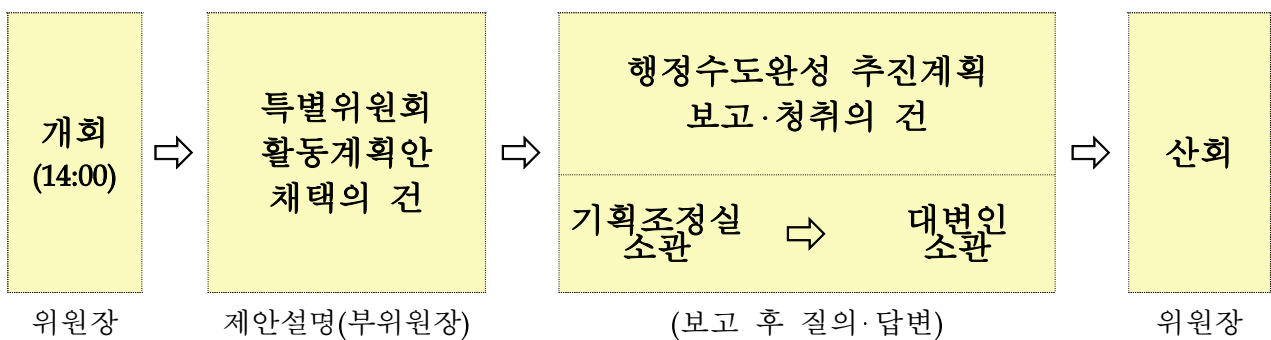
2

특별위원회 회의(제2차)

□ 개 요

- (일 시) '19. 1. 25.(금) 14:00
-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5층/504호)
- (참 석 자) 특별위원회 위원(7명) 및 관계공무원*
 - *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행정복지전문위원 등
- (안 건) 2건
 -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 시(市) 집행부 세종시 행정수도완성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 진행순서



□ 향후계획

-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른 특위 활동 추진(연중 수시)

3

특별위원회 활동 홍보를 위한 세종시기자협의회 간담회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구성 및 운영 중인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위원장 : 윤형권 의원)의 활동 계획 브리핑과 홍보 협조를 위해 세종시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19.2.14.(목) 11:30 /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

○ (대 상) 행정수도특위 위원 및 세종시기자협의회 회원

○ (참 석 자) 20명(특위 위원 4*,기자협의회 회원 16**)

* 윤형권, 손현옥, 임채성, 채평석

** <붙임> 회원 명단 참조

○ (주요내용)

-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브리핑 및 홍보 협조
- 행정수도완성 캘리그래피 액자 전달식
- 브리핑 및 간담회 후 오찬

□ 진 행(안) ▶ 사회 : 행정복지전문위원



□ 향후계획

○ 타 세종시(의회) 출입기자단체와의 간담회 일정 조율 및 실시

4

특별위원회 활동 홍보를 위한 세종시출입기자단 간담회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구성 및 운영 중인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위원장 : 윤형권 의원)의 활동 계획 브리핑과 홍보 협조를 위해 세종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19.2.26.(화) 12:00 / 쿡대박(금남면 소재 식당)

○ (대 상) 행정수도특위 위원 및 세종시출입기자단 회원

○ (참 석 자) 25명(특위 위원 6*, 기자협의회 회원 14**, 직원 5명)

* 윤형권, 박용희, 손인수, 손현옥, 임채성, 채평석 ** <붙임> 회 명단 참조

○ (주요내용)

-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브리핑 및 홍보 협조
- 브리핑 및 간담회 후 오찬

□ 향후계획

○ 타 세종시(의회) 출입기자단체와의 간담회 일정 조율 및 실시

5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입장 발표

□ 개요

- (일 시) '19. 8. 13.(화) 10:00
- (내 용)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보도자료 배포

<보도자료>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국회용역 결과 입장 발표

윤형권 특위위원장 연구용역 결과 존중 후속 조치 당부

13일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대해 33만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세종시의회는 “환영한다” 면서도 설계비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아래 행정수도특위)는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담긴 △국회세종의사당 규모 및 대안별 비용 분석 △입지 검토 △종사자 정착방안 등이 실행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행정수도특위는 국회가 국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연구용역 결과)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세종시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청사 공무원의 서울(국회) 출장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따가운 지적을 받고 있다.

행수특위는 줄곧 “국회 세종 의사당에 예결위 설치 및 세종청사 입지 부처와 관련된 상임위 설치는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해왔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행수특위 윤형권 위원장은 “국회는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50억을 반영해야 세종의사당 설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실행을 재차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는 윤형권, 박용희, 채평석, 박성수, 손현옥, 임채성, 손인수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한편, 연구용역은 지난 1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6개월간의 용역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국토연구원이 맡아 수행했다.

6

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식

- ◇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산하에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자문단 구성 계획

- 인 원 : 11명*
 - * 행정수도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임 기 : 2019. 8. 16. ~ 2019. 12. 31(행수 특위 활동기간)
- 기능 및 역할
 - 행정수도완성 추진방향 및 현안에 관한 자문
 - 행정수도완성 관련 행사 참석 및 의견 제시
- 구 성 : 특위 위원 추천
- 운 영 : 현안 사항 발생 등 필요 시 간담회 개최
- 자문수당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급

□ 위촉식 계획

- 일시 · 장소 : '19. 8. 16.(금) 10시 / 의정실(301호)
- 주요 내용 :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 ~ 10:05	5'	▶ 개회 및 인사말씀	전문위원, 의장님
10:05 ~ 10:15	10'	▶ 위촉장 수여 ※ 9명 참석 예정	의장님
10:15 ~ 10:25	10'	▶ 자문위원 소개	위원장
10:25 ~ 10:30	5'	▶ 사진촬영	

※ 위촉식 종료 후 행정수도완성추진단과의 간담회(10:30~12:00) 진행

붙임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자문단 명단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등
1	김중규	세종소리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일보 기자 충남대 겸임교수
2	문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前 화순군 부군수
3	손영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대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미술아카데미 연구소 대표 보람동체육회부회장
4	안용준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SK건설 연구소 카이스트 공학박사
5	이민기	공주대학교 조교수 (체육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운동생리학회 이사 대한인명구조협회 충남지회 부회장 한국대학정구연맹 이사
6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연구원 연구실장 환경부 정책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세종시시민주권회의 위원
7	임덕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시 문화재 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8	임봉철	한국농촌지도자 세종시 연합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아파트 조합장 새농민회 연기군회장
9	임승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前 강릉대 총장
10	정연숙	세종맘카페 대표 매거진세종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시 태권도협회 부회장 세종축제 추진위원
11	최정수	한국영상대학교 교수 (영상무대디자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상임대표(전임) 세종시 시민주권회의 위원장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7

특별위원회 자문단 간담회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9. 11. 5.(화) 11:00 ~ 13:00 / 시의회 의정실(301호)
- 참석대상 : 총 10여 명
 - (특위 위원) 윤형권, 박용희, 박성수, 손인수, 손현옥, 임채성, 채평석
 - (자문단) 전체 11명 중 3명* 참석
 - * 김종규, 문인수, 안용준 자문위원
- 내용 :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반영 대응 관련 논의 등 행정수도 완성 관련 시책 논의 및 제안

□ 시간 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1:00 ~ 11: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행정복지 전문위원
11:05 ~ 11:10	5'	▶ 인사말씀	윤형권 위원장
11:10 ~ 11:20	10'	▶ 행정수도완성 관련 시책 추진상황 보고	행정복지 전문위원
11:20 ~ 12:00	40'	▶ 자유토론(40') -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반영 대응관련 논의, 행정수도완성 관련 시책 논의·제안 등	윤형권 위원장
12:00 ~ 12:05	5'	▶ 폐회 및 기념촬영	
12:05 ~ 13:00	55'	▶ 오찬	

8

‘20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 개요

- (일 시) ‘19. 11. 28.(목) 11:00
- (장 소) 세종시청 정음실
- (참 석 자) 특별위원회 위원(4명*) 및 시 출입기자단
 - * 윤형권,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 (내 용) 2020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29일부터 열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균형발전 및 행정비효율 해소 위해 정상 추진돼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 10억 원의 반영 여부가 29일(금)부터 열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형권 의원과 부위원장 박용희 의원, 위원 손현옥 의원, 위원 임채성 의원은 28일 세종시청에서 2020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는 28일 현재 ‘20년도 정부예산에 대해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이하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20년도 정부예산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의 예산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소관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안대로 통과 되었으나, 14일에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류사업으로 분류된 상태다.

세종시는 11월 현재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나, 출범 초기부터 서울에 있는 국회에 공무원의 잦은 출장 등으로 행정 비효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지난 2017년 대선 때 여야 모두 5명의 후보자 공약사항이었던 데다 최근 열린 국회토론에서도 본회의와 국회의장의 위치라는 본질적 기능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위헌 논란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이었다.

윤형권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충청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20년도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반영에 적극 동의하고,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행정수도완성 대장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박용희(자유한국당 소속) 부위원장은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균형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를 위해 국회방문 기자회견 및 촉구 결의안 채택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9

특별위원회 회의(제3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현안 과제들의 추진을 촉구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시(市) 집행부의 행정수도완성 관련 '19년 추진실적 및 '20년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19. 12. 4.(수) 14:00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501호)
- (참 석 자) 특별위원회 위원(7명) 및 관계공무원*
 - * 기획조정실장, 행정복지전문위원 등
- (안 건) 2건
 -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 제3대 후반기 원 구성을 고려하여 6개월('20.1.1. ~ 6.30.) 연장
 - 市 '19년 행정수도완성 추진실적 및 '20년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 시간 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 개회 및 인사말씀	윤형권위원장
14:05 ~ 14:10	5'	▶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윤형권위원장
14:15 ~ 14:30	15'	▶ 행정수도완성 관련 시책 '19년 추진상황 및 '20년 추진계획 보고 ※ 보고 후 질의·답변	기획조정실장
14:30 ~ 14:35	5'	▶ 산회 및 기념촬영	

□ 향후 일정

-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본회의 상정 : '19. 12. 13.(금)

10

특별위원회 회의(제4차)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윤형권 위원장이 의원직을 사퇴('20.1.8.)함에 따라 특위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20. 1. 22.(수) 09:30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501호)
- (참 석 자) 특별위원회 위원(6명) 및 관계 공무원*
 - * 행정복지전문위원 등
- (안 건) 1건
 -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시간 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30 ~ 09:35	5'	▶ 개회 및 인사말씀	박용희 부위원장
09:35 ~ 09:45	10'	▶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박용희 부위원장 및 전문위원
09:45 ~ 09:50	5'	▶ 산회 및 기념촬영	

□ 향후 일정

-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사항 보고 : '20. 1. 22.(수) 본회의

11

특별위원회 회의(제5차)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18.11.12.~'20.6.30.)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집행부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관련 '20년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20. 6. 22.(월) 11:00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501호)
- (참 석 자) 특별위원회 위원*(6명) 및 관계공무원**
 - * 채평석, 박용희, 박성수, 손인수, 손현옥, 임채성
 - ** 기획조정실장, 행정복지전문위원 등
- (안 건) 2건
 - 市 '20년 행정수도완성 정책 추진현황 보고·청취의 건
 -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시간 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1:00 ~ 11:05	5'	▶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11:05 ~ 11:20	15'	▶ '20년 행정수도완성 정책 추진현황 보고·청취 ※ 질의·응답	기획조정실장
11:20 ~ 11:35	15'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부위원장 및 위원장
11:35 ~ 11:40	5'	▶ 산회 및 기념촬영	

□ 향후 일정

-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본회의 상정 : '20. 6. 23.(화)



3. 특별위원회·市·시민단체 공조활동

3

특위 · 市 집행부 · 시민단체 공조활동

1

세종연구실 워크숍

「행정수도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토의 참여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상호이해와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세종연구실 워크숍」中 행정수도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과제
토의에 참석하고자 함

□ 개 요

- 행사명 : 「세종연구실 워크숍」中 행정수도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토의
- 일 시 : '19. 3. 28.(목) 9:10 ~ 13:30
- 장 소 : 고마 아트센터(공주시 웅진동 소재)
- 참 석 : 3명(윤형권 위원장, 손현옥, 채평석)
※ 총 인원 : 40여명(기획조정실장,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행정수도완성시민대책위, 관계 직원 등)
- 내 용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부처 추가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안건별 분임 토의
- 주최 · 주관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 진행 순서

시간계획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09:10	09:40	30'	○ 시의회 출발 및 이동	
10:00	10: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0:05	10:30	25'	○ 인사말씀	기획조정실장→세종연구실장→ 행정수도특위위원장→ 시민대책위 대표
10:30	11:35	65'	○ 분임별 토의 및 발표	5개 분임*
11:35	11:45	10'	○ 종합토론 및 질의 응답	
11:45	13:00	75'	○ 식당 이동 및 오찬	공주 한옥마을
13:00	13:30	30'	○ 이동 및 시의회 도착	

* 의원별 분임 참석안: 손현옥 의원(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윤형권·채평석 의원(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2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연계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

◇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형 분권모델 확립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참석 계획을 보고 드림

□ 행사 개요

- 행사명 :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 일 시 : '19. 4. 15.(월) 09:00 ~ 19:00 ※ 토론회 : 14:00~16:00
- 장 소 : 국회 도서관 강당
- 참 석 : 행정수도완성특위 위원 포함 시 의원(14명) 및 직원
※ 총 인원 : 200여명(정부 인사, 학회, 언론, 공무원 등)
- 공동주최 : 이해찬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충청투데이
- 내 용 : 세종시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등

- | | |
|--------------------------|-------------------------|
| ▫ 발 제 : 이춘희(세종특별자치시장) | ▫ 좌 장 : 안성호(한국행정연구원장) |
| ▫ 패 널 : 김민기(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 |
| 김중석(자치분권위 자치제도분과위원장) | 김윤식(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
| 정정화(한국지방자치학회장) | 이상선(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

□ 진행 순서

시간계획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09:00	11:30	150 '	○ 시의회 출발 및 이동(서울)	08:50 집결(의회 주차장/버스)
11:30	13:00	90 '	○ 중식	
13:00	13:55	55 '	○ 이동(국회) 및 세종시법 개정촉구 퍼포먼스	
13:55	14:00	5 '	○ 동영상 시청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인포 영상
14:00	14:20	20 '	○ 개회, 인사말씀, 축사	- 인사말씀 : 국회의원 이해찬 - 축사 : 국회의장 문희상 등
14:20	16:00	100 '	○ 토론회	
16:00	19:00	180 '	○ 이동 및 도착	

붙임

세종시법 개정 촉구 퍼포먼스 및 이동 동선

□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퍼포먼스)**

13:35 ~ 13:40 (5분간)

- 참석자 : 30여 명 (시의원 및 직원 등)
- 내 용 : 다함께 현수막을 들고 세종시법 개정 구호 제창

퍼포먼스 장소	현수막 시안 (1m×20cm)
	 

□ **토론회 장소 이동동선**

13:40 ~ 13:45 (5분)

- 장 소 : 국회 도서관 강당(지하1층)



3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연석회의 참여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 5. 29.(수) 15:00 ~ 17:00 / 세종실(509호)
- 참석대상 : 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행정수도 완성 세종 시민대책위원회,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시청 실무지원단*
 - *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기획담당, 정책담당, 균형발전전략담당, 투자기획담당
- 회의내용 :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진행 상황 보고, 분임토의 및 발표, 향후계획 논의 등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목록]

- 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김성표 실장, 이윤희 연구위원)
- ②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안용준 연구위원, 최성은 연구위원)
- ③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 추가 이전(김흥주 연구위원)
- ④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지남석 책임연구위원)
- ⑤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민경선 연구위원)

□ 시간 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 ~ 15: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기획담당
15:05 ~ 15:15	10'	▶ 인사말씀 (행정수도완성 특위 위원(장), 시민대책위 상임대표)	
15:15 ~ 16:10	55'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계획 보고(5') ▶ 행정수도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보고(50')	기획담당 세종연구실
16:10 ~ 16:40	30'	▶ 종합토론(30') - 정책연구과제 반영사항 건의, 향후 활용방안 제안 등	
16:40 ~ 16:45	5'	▶ 폐회 및 기념촬영	

4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간담회 개최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9. 8. 16.(금) 10:30 ~ 12:00 / 시의회 의정실(301호)
- 참석대상 :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및 자문단, 지방분권세종회의, 시청 실무지원단*

* 실무지원단 中 기획조정실장, 기획담당 배석

- 내 용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결과 공유 및 향후 대책 등 논의

□ 시간 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30 ~ 10:3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전문위원
10:35 ~ 10:45	10'	▶ 인사말씀 (행정수도완성 특위위원장,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위원장, 상임대표
10:45 ~ 11:00	15'	▶ 행정수도완성 관련 시책 전반 추진상황 보고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결과 공유	기획조정실장
11:00 ~ 11:45	45'	▶ 자유토론(45')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 논의, 시책 제안 등	위원장
11:45 ~ 11:50	5'	▶ 폐회 및 기념촬영	
11:50 ~ 12:00	10'	▶ 오찬 장소 이동	

5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 참여

I 개 요

- (일시/장소) '19.9.20(금) 15:00 /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 300석)
- (주 제)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방안
- (주 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 (주관/후원) 세종특별자치시 / 중앙일보
- (참석인원) 250명(시장, 국회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 특위위원(1) : 박성수 / 시의원(3) : 이영세, 이윤희, 노종용 참석

II 시간 계획

◆ 사회자 : 조승래 간사

내 용		시 간		주 요 내 용
입 장		14:55 ~ 15:00	5'	▶ 입장 및 홍보영상 상영
1부 (40')	개회	15:00 ~ 15: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 내빈소개
	인사말씀	15:05 ~ 15:15	10'	▶ (개회사) 이해찬, 박병석 공동위원장
		15:15 ~ 15:20	5'	▶ (환영사) 이춘희 시장
		15:20 ~ 15:30	10'	▶ (축 사) 내외빈
	퍼포먼스	15:30 ~ 15:35	5	▶ 국회 세종의사당 구호 제창* 및 기념촬영 * 행정비효율 해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손현수막)
회의장 장내정리(5')				
2부 (70')	발제	15:40 ~ 15:55	15'	▶ (발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종합토론	15:55 ~ 16:35	40'	▶ (좌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 (토론위원)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윤수정 공주대 교수
	질의응답	16:35 ~ 16:45	10'	
폐 회		16:45 ~ 16:50	5'	▶ 정리 및 폐회

6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건립 추진 촉구 기자회견 및
국회사무처·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에 건의자료 전달**

□ 개 요

- (때 · 곳) '19. 11. 6.(수) 8시 ~ 16시 / 국회의사당
- (참석자) 40여명 * 특위 위원, 자문단, 지방분권 세종회의, 의회 출입기자단
- (이 동) 버스 1대(의회버스)

□ 시간 계획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출 발	08:00 ~ 11:00	180'	◦ 이동(세종 → 서울)
기자회견	11:00~11:30	30'	◦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건립 추진 촉구 기자회견 ◦ 국회의사당 정론관(본관 1층) ◦ 특위 위원, 자문단, 지방분권 세종회의 등 참석
국회사무처 미래통합당 정책위	11:30 ~ 12:00	30'	◦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건립 추진 건의자료* 전달 * 의회 차원 촉구 결의안은 제59회 제2차정례회 통과 후 송부 예정
퍼포먼스 (기념촬영)	12:00 ~ 12:10	10'	◦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반영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 참가자 전체 국회의사당 분수대 앞 집결
오 찬	12:10 ~ 13:00	'50	◦ 기자회견 참석자(국회의사당 인근)
해산·이동	13:00 ~ 16:00	180'	◦ 이동(서울 → 세종)

□ 소요예산

- 975천원(식대 : 15,000원 × 45명 = 675천원 / 현수막 : 300천원)

□ 행정사항

- 국회사무처·미통당 정책위 면담 확정, 기자회견문 확정, 의회버스 운행, 영상 및 사진, 의회 출입기자단 홍보, 오찬, 현수막 등 준비

<기자회견문>

550만 충청인의 염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드시 반영하라

지난 10월 24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기본설계비 10억 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정상추진을 바라는 550만 충청인의 염원에 반하는 것임을 경고하며, 내년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서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에서 국회 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난 대선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업인데다,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본회의와 의장이 서울에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정설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는 2016년 당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후,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2018년 11월 27일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분원 설치를 염두한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논의 법안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작년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연구용역 예산, 기본 설계비 예산이 세워져 올해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과 이전 타당성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단군 이래의 최대의 국책도시이다. 즉 세종시 건설사업의 주체는 행복도시건설청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세종시 공공시설의 예산은 행복도시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을 집행했고, 정부기관 시설 예산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아닌 행특회계를 통해 집행했다. 아울러 행특

회계가 집행될 경우 국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설령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의지’와 ‘진정성’의 문제이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듯 문제가 있다면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물꼬를 트면 된다. 법과 제도적 해결에는 정작 관심이 없으면서 법 탓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제1 야당으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행정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선후보의 공약은 당의 공약과도 같은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불과 2년 전의 공약을 스스로 부인하는 이중적 행태를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제2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처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올해 8월 7일,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송아영)은 논평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국회세종의사당 연구용역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속히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안보다 더 우수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비롯한 행정수도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당당하게 선택을 받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약속한 만큼, 여야 논의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500조가 넘는 새해 예산에서 10억 원은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예산이다. 하지만 국회

세중의사당 추가 설계비용 10억 원은 단지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대의명분과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치권의 첫걸음으로 상징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세중의사당 설계비 반영에 적극 동의하고,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정상추진과 행정수도 완성 대장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11월 6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7

충청권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참여

I 개 요

- (일시/장소) '19.12.9(월) 14:00 / 세종시청 대회의실(5층, 100석)
- (주 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충청권 협력방안 모색
- (주 최) 대전일보,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 (참석인원) 100명(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 (토 론 자) 7명 * 사회자 : 대전일보 측

- ▶ 좌 장 : 김상봉 고려대 교수(세종-제주 균형발전 특위 위원)
- ▶ 발 제 : 최진혁 충남대 교수(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장)
- ▶ 토론자 : ①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②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공동의장, ③윤형권 세종시의원, ④박문희 충북도의원, ⑤김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 지역혁신과장

II 시간 계획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식 전		13:40~14:00	20'	◦ 동영상 상영
1부	개 회 사	14:00~14:10	10'	◦ 이춘희 세종시장 ◦ 강영욱 대전일보 사장 ◦ 김준식 충청권 공대위 공동대표
	축 사	14:10~14:10	10'	◦ 충청권 국회의원 ◦ 4개 시도지사, 시의회 의장 등
	기념촬영	14:10~14:15	5'	◦ 시장, 토론자 및 주요내빈
2부	토 론 회	14:15~15:25	70'	◦ 발 제 ◦ 토 론 ◦ 종합토론 및 청중질의·응답
폐 회		15:25~15:30	5'	◦ 정리 및 폐회

8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행사 연계
‘행정수도완성 촉구결의’ 참여

□ 촉구결의 개요

< 균형발전 16주년 기념행사 개요 >

- ▶ (일시/장소) ‘20.5.7(목), 13:30~16: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기타행사: 균형발전 청년서포터즈 발대식(10:00 ~ 11:40), 오찬(12:00 ~ 13:00)
- ▶ (주 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 코로나 19 이후 균형발전
- ▶ (참 석) 시장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 (목 적)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와 연계해, 국가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꼭 필요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국회에서 대외적으로 표명
- (때 · 곳) ‘20.5.7(목) 12:50~13:10 / 국회본관 앞 분수대(포토존)
- (참여대상) 30여명 / 시장님, 시의원, 시민단체(지방분권세종회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관계자 등) 등
- (행사내용)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 제창, 기념촬영, 마스크 배부(홍보용)

□ 시간 계획

출발 (세종시청)	⇒ 180'	도착 (국회)	⇒	촉구결의 (행사참석)	⇒	출 발 (국회)	⇒ 180'	도착 (세종시청)
09:30~		12:30		12:30~14:30		14:30		17:30



4. 결의안 발의

4

결의안 발의·성명서 발표

1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 의 안

(윤형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4
----------	------

발의연월일 : 2019. 2. 22.

발 의 자 : 윤형권, 서금택, 안찬영,
이영세, 이재현, 채평석,
차성호, 상병헌, 김원식,
노종용, 박성수, 박용희,
손인수, 손현옥, 유철규,
이윤희, 이태환, 임채성

I. 주 문

-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세종시에 있는 반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서울에 상주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운영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한층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함

II. 제안이유

- 세종시는 소속기관을 포함한 41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19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의 추가 이전이 있을 예정임

- 대부분의 중앙부처는 세종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서울에 상주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운영 비효율에 대한 문제제기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올해 초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집무실을 이전할 공간 확보와 경호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되었음
-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국민과 소통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를 반영한 것임
-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는 한편,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함

〈발 송 처〉 대한민국 국회의장,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정의당 대표, 국무총리, 전국 지방의회

붙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1부. 끝.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소명 아래 2012년 7월 출범한 후, 현재까지 소속기관을 포함한 41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하였고, '19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가 이전이 있을 예정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부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서울에 상주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정운영의 분절현상과 행정운영 비효율 및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문제제기와 걱정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중심지이자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는 대통령 집무실이 정부세종 3청사에 즉시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국정운영의 효율성 등을 극대화하여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등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 실현 및 국정운영의 비효율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즉시 설치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새로 건립되는 정부세종 3청사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넘어 국제적으로 정치·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 2. 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2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 의 안

(윤형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47
----------	------

발의연월일 : 2019. 11. 13.

발 의 자 : 윤형권, 서금택, 안찬영,
이영세, 이재현, 채평석,
차성호, 상병헌, 김원식,
노종용, 박성수, 박용희,
손인수, 손현옥, 유철규,
이윤희, 이태환, 임채성

I. 주 문

-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함

II.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임

- 그러나 아직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원화 되어있어 정부와 국회 간 신속한 업무 연계가 어렵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세종청사에서 여의도 국회로 법률안 및 예산 심사 대응 등을 위해 빈번하게 공무출장을 다니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 또한 급증하고 있음
- 또한,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의 50% 돌파가 예상되는 등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기폭제가 될 것임
- 이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함

〈발 송 처〉 대한민국 국회의장,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정의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우리공화당 대표, 민중당 대표, 국무총리, 전국 지방의회

붙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1부. 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다.

그러나 아직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원화 되어있어 정부와 국회 간 신속한 업무 연계가 어렵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세종청사에서 여의도 국회로 법률안 및 예산 심사 대응 등을 위해 빈번하게 공무 출장을 다니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 또한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요구자료(이해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30개)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 원, 출장횟수는 86.9만 회로 나타났으며, 국회 출장비율이 60%인 점을 감안 시, 3년간 국회의로의 출장비는 550억 원, 출장횟수는 52.1만 회에 달했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50% 돌파가 예상되는 등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기폭제가 될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국토의 중심부인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균형잡힌 전국적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국회 예결위와 운영위는 2020년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반영을 두고 국회법 개정 등 법적인 절차를 문제삼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지난 대선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업인데다,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본 회의와 의장이 서울에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정설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행정 비효율 해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조속히 설치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2020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 11.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3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 개 요

- (일 시) '19. 8. 22. (목) 11:00
- (장 소) 세종시청 정음실
- (참 석 자) 특별위원회 위원(5*) , 지방분권세종회의(8), 시 출입기자단
* 윤형권, 박용희, 손현옥, 손인수, 채평석
- (내 용)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성명서>

성명서

국회사무처는 지난 8월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2016년 6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것으로, 국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가 스스로 국회 분원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대한민국 헌정사 70년 만에 입법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수도권 과밀해소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행정부와 입법부 이원화에 따른 시간·경제적 낭비를 줄여 국가 정책의 품질 및 업무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완성 실무지원단’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34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을 대표하여 국회에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결과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연구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대안 중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와 관련된 상임 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이전규모 및 시기가 포함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하여,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을 연내 집행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추가 설계비용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여야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8월 22일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4

「행정수도완성 정책의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제시한 주요 핵심 10대공약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이 전무하여, 각 정당 및 후보자에 행정수도완성 관련 정책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함

□ 개 요

- (내 용) 행정수도완성 관련 정책의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 (일 시) '20. 3. 30.(월) 11:00 ~
- (주 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지방분권세종회의
- (장 소) 시청 정음실(2층 브리핑실)
- (참 석 자) 특별위원회 위원(5명*) 및 지방분권세종회의 위원(7명)**
 - * 채평석, 박용희, 손인수, 손현옥, 임채성
 - ** 김준식, 홍석하, 김수현, 안신일, 차정님, 유순희, 송경희
- (참 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비대면 발표 진행
 - '20. 3. 29.(일)자로 시청 기자실이 폐쇄 예정으로, SNS(시 의회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예정

□ 행정 사항

- 성명서 및 보도자료 작성
- 출입 기자단 안내 문자 발송
- SNS Live 방송(시 의회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 송출 협의

성명서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제시한 주요 핵심 10대공약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들이 실종되었다.

지난 해 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정책의 누락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2020년 3월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는 등 행정수도로의 면모를 갖춰가고는 있으나,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가 서울과 세종에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심각한 상태이다.

당초 출범 취지대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행정수도로 완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여야는 2012년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쟁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는 35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을 대표하여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행정수도완성 정책공약 제시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각 정당 및 후보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 정책을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각 정당 및 후보자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 정책에 대한 정책 구상방안, 입법적 지원 의지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각 정당은 20대 국회에서 제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3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

5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21대 국회에 바란다』 성명서 발표**

제21대 국회 개원(‘20.5.30.)을 맞이하여, 21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이 내세운 선거 공약 중 ‘행정수도완성 정책’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바란다』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내 용)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제21대 국회에 바란다』 성명서 발표
- (일 시) ‘20. 6. 1.(월) 10:00
- (주 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지방분권세종회의
- (장 소) 시청 정음실(2층 브리핑실)
- (참 석 자) 특별위원회 위원(6인*) 및 지방분권세종회의 위원(6인**)

* 채평석, 박용희, 박성수, 손인수, 손현옥, 임채성

** 김준식, 정준이, 홍석하, 김수현, 백인영, 차정남

※ 참석자는 변동 가능성 있음

□ 행정 사항

- 성명서 및 보도자료 작성
- 성명서 발표 일정 조율 및 위원 안내
- 출입기자단 안내 및 홍보(의정담당관)
- 정음실 대관 협의(시 대변인)

성명서

21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21대 국회는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민생과 경제, 평화와 인권 신장에 앞장서는 ‘일하는 국회’로 평가받기를 희망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살리기 국회’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후 후속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지방의 조직과 재정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핵심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는 등 자치분권 과제도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대두, 국가정책의 품질 저하,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짐에 따라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나아가 행정수도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당초 출범 취지대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세종시는 행정수도

로 완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2012년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쟁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반드시 실천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시민 약속이행 국회’가 되어야 한다.

만약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와 같이 ‘동물 국회’, ‘식물국회’를 되풀이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지방살리기 의제를 법제화하는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후반기에 접어드는 향후 2년이 시대적 과업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대장정에 사생결단의 의지로 결연히 나서야 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는 35만 세종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21대 국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축으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21대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 ‘세종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 총선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21대 국회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21대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책구상 방안, 입법적 지원 의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21대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총청원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과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정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



5. 사진으로 보는 특별위원회 활동

5 사진으로 보는 특별위원회 활동

1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2018. 12. 31.(월) 10:00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시의회 504호)
- 특별위원회 위원장(윤형권 의원) · 부위원장(박용희 의원) 선임 등



▲ 윤형권 특별위원장 및 박용희 부위원장 선임

②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2019. 1. 25.(금) 10:00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시의회 504호)

-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
- 市 집행부 행정수도완성 추진계획 보고·청취



▲ 특위 2차 회의(윤형권, 박용희, 박성수, 손인수, 채평석 위원 순)

③ 특별위원회 활동 홍보를 위한 세종시기자협의회 간담회

○ 2019. 2. 14.(목) 11:30 /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

-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브리핑 및 홍보 협조
- 행정수도완성 캘리그래피 액자 전달식



▲ 행정수도완성 캘피그라피 전달식 후 기념촬영

4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

○ 2019. 3. 22.(금) 11:30 /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



▲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

5 세종연구실 워크숍 「행정수도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토의 참여

○ 2019. 3. 28.(목) 10:00 / 고마아트센터(공주시)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부처 추가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안건별 분임 토의 참여



▲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과제별 분임토의 참여

⑥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참석

○ 2019. 4. 15.(월) 14:00 / 국회 도서관 강당

- 세종시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등



▲ 세종시법 개정 촉구 퍼포먼스



▲ 세종시법 개정 촉구 퍼포먼스(채평석, 박용희, 박성수, 임채성 의원 순)



▲ 세종시법 개정 촉구 퍼포먼스(노종용, 상병헌, 유철규, 이영세 의원 순)



▲ 세종시법 개정 촉구 퍼포먼스(이윤희, 이재현, 이태환, 차성호 의원 순)

7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연석회의 참석

○ 2019. 5. 29.(수) 15:00 / 세종시청 세종실(509호)

-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진행 상황 보고, 분임토의 및 발표, 향후계획 논의 등



▲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연석회의 참석(단체사진, 손인수, 박용희, 채평석 위원 순)

8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식

○ 2019. 8. 16.(금) 10:00 / 세종시의회 의정실(301호)

- 행정수도완성 추진방향 및 현안에 관한 자문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특별위원회 산하에 자문단 구성



▲ 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식

9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간담회 개최

○ 2019. 8. 16.(금) 10:30 / 세종시의회 의정실(301호)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결과 공유 및 향후 대책 등 논의



▲ 연석회의 참석 후 기념촬영 모습

10 국회 용역결과 이행 촉구 성명서 발표

○ 2019. 8. 22.(금) 10:30 / 세종시청 정음실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민·정 합동 성명서 발표



▲ 국회 용역결과 이행 촉구 성명서 발표

11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 참석

○ 2019. 9. 20.(금) 15:00 / 국회도서관 대강당

-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방안 토론 참석



12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자문단 간담회

○ 2019. 11. 5.(화) 11:00 / 세종시의회 의정실(301호)

-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반영 대응 관련 논의 등 행정수도완성 관련 시책 논의 및 제안



13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촉구 기자회견 및 국회사무처·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에 건의자료 전달

○ 2019. 11. 6.(수) 11:00 / 국회의사당 정론관

-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건립 추진 촉구 기자회견 및 국회사무처,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에 건의자료 전달



▲ 기자회견문 발표(두번째 줄 사진 왼쪽부터 윤형권 前위원장, 조승래 국회의원, 충청권 공대위 이상선 대표, 지방분권세종회의 정준이 공동위원장 순)



▲ 국회 사무총장 비서실장(정재흥)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건의자료 전달



▲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보좌역(유제원)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건의자료 전달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퍼포먼스

14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

- 2019. 11. 13.(수) 11:00 /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 제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



15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반영 촉구 기자회견

- 2019. 11. 28.(목) 11:00 / 세종시청 정음실
- 2020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16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2019. 12. 4.(수) 14:00 /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501호)

-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市 '19년 행정수도완성 추진실적 및 '20년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17 충청권 상생 협력방안 토론회 참여

○ 2019. 12. 9.(월) 14:00 / 세종시청 대회의실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충청권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中 ‘행정수도 기능강화를 위한 전략’ 토론에 패널로 참여



18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2020. 1. 22.(수) 09:30 /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501호)

- 윤형권 위원장이 의원직을 사퇴('20.1.8.)함에 따라 위원장을 채평석 위원장으로 새로 선출



19 행정수도완성 정책의 21대 총선 공약화 촉구 성명서 발표

○ 2020. 3. 30.(월) 11:00 / 시청 정음실

- 행정수도완성 관련 정책의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20 국가 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행정수도완성 촉구결의

○ 2020. 5. 7.(목) 12:30~ 16:30 / 국회의원회관

- 국가 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 국가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꼭 필요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국회에서 대외적으로 표명



21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21대 국회에 바란다』 성명서 발표

○ 2020. 6. 1.(월) 10:00~ / 시청 정음실

-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제21대 국회에 바란다』

성명서 발표







Ⅳ. 참고자료

- 1. 언론 보도자료**
- 2.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



1. 언론 보도자료

1 언론 보도자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 2018년 12월 31일(월)			
제 공 부 서	의 회 사 무 처 (행 정 복 지 전 문 위 원 실)	전 문 위 원	임 재 공	☎ (044) 300-7442
		주 무 관	우 종 필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선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 시작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의장 서금택)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완성특위)”는 12월 31일(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윤형권 의원(제9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는 박용희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을 각각 선출했다.

행정수도완성특위는 윤형권위원장, 박용희부위원장을 비롯한 박성수, 손인수, 손현옥, 임채성, 채평석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형권의원은 “행정수도완성특위에서는 세종시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앞으로 행정수도완성특위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방문과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市 집행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언론 보도 현황 (22개 언론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아시아 뉴스통신	2018.12.31.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본격 활동 시작	
충청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 위원회, 31일 활동시작	
디트뉴스24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특위' 윤형권 위원장 선임	
이뉴스투데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특위' 윤형권 위원장 선임	
충남도민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	
특급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 제1차 회의 개최	
충청신문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1차회의	
세계타임즈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충청탐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IPN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중부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세종시	
타임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백제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 위 원장·부위원장 선임	
세종방송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본격 가동	
세종 nTV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 시작	
동양일보	2019.1.1.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굿모닝충청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활동 본격화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대전MBC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해 본격 활동	
MBS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뉴데일리	2019.1.2.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윤형권 위원장’ 선임	
일간투데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개최	

 <p>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p>	<p>보 도 자 료 배포일시 : 2018년 1월 25일(금)</p>			
제 공 부 서	의 회 사 무 처 (행 정 복 지 전 문 위 원 실)	전 문 위 원 주 무 관	이 익 수 우 중 필	☎ (044) 300-7442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계획
보고청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이하 행정수도완성특위)는 1월 25일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완성특위 활동계획안 채택과 함께 시 집행부의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행정수도완성특위는 ▲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추진 ▲ 시민단체·의회·시 집행부 등과 공조체계 마련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타시·도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주요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 활동 전개 등이 포함된 활동 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또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단장 고기동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시 집행부의 ‘행정수도완성 추진계획’에 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윤형권 위원장은 “올 한해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이자 골든타임” 이라면서 “시민, 의회, 집행부 등 각계각층의 협력과 의지를 집결하여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고 강조했다.

■ 주요 언론 보도 현황 (22개 언론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충청뉴스	2019.1.26.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	
동양일보	2019.1.27.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2차 회의 개최	
대전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중부매일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충남일보	〃	세종시의회 “올해가 행정수도 완성 골든타임”	
충청타임즈	〃	행정수도완성 특위 회의 개최	
금강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제2차 회의 개최	
내외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2차 회의...계획 수립	
서울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제2차 회의	
브릿지경제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특급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 제2차 회의 개최	
MBS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충남도민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뉴스충청인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계타임즈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탐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계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대전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중부매일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타임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아시아 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	
굿모닝충청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위한 공조체제 구축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div style="text-align: center;">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p style="margin: 0;">배포일시: 2019년 2월 14일(목)</p> </div>			
제 공 부 서	의 회 사 무 처 (의정담당관)	공보담당 주 무 관	김 종 락 박 천 국	☎ (044)300-7248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첫 기자간담회 개최

윤형권 위원장 “시민단체 등과 공조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 거두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위)는 14일 오전 11시 30분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활동계획 브리핑과 함께 언론인들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행정수도완성특위 윤형권 위원장과 손현옥 위원, 세종시기자협의회 소속 언론인 14명 등이 참석했다.

윤형권 위원장은 주요 활동계획 브리핑을 통해 “시민단체와 시 집행부, 전국 지방자치의회·단체 등과 협력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헌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며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뿐 아니라, 시민단체와도 공조 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수도완성특위는 세종시기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기자간담회를 정례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완성특위의 주요 활동 성과와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고 다각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행정

수도 개헌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각오다.

언론인들 역시 세종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중앙 정치권과도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내년 총선 때 행정수도 명문화가 공약에 나올 수 있도록 정치적 여건 마련에도 힘쓰겠다” 며 “국회로부터 적잖은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여론 확산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논산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탠 김종민 국회의원을 만나 감사의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용역 2억원의 조기 집행을 국회사무처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기자간담회 이후에는 ‘행정수도완성 캘리그라피’ 액자 전달식을 가졌다.

■ 주요 언론 보도 현황 (8개 언론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아시아 뉴스통신	2019.2.14.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기자 협의회와 간담회	
충청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최선	
농수축산신문	〃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최선’	
로컬투데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기자간담회...’협력 방안’ 논의	
백제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첫 기자간담회	
세종방송	〃	윤형권 위원장 “행정수도완성특별위, 실질적 성과 거두겠다”	
MBS	2019.2.15.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첫 기자간담회	
충청탐뉴스	〃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위, 위원 장,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최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div style="text-align: center;">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p style="margin: 0;">배포일시: 2019년 2월 26일(화)</p> </div>			
제 공 부 서	의 회 사 무 처 (의정담당관)	공보담당 주 무 관	김 종 락 박 천 국	☎ (044)300-7248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올해 활동 방향 공유하는 등 언론계에 적극적인 협력 요청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완성특위)는 26일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올해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등 언론계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윤형권 위원장을 비롯해 채평석·박용희·손현옥·손인수 위원과 행정수도완성특위 세종시 출입기자단 12명 등이 참석했다.

윤형권 위원장은 올해 활동 계획에 대해 “지역사회 원로 및 활동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우군을 만들고 시민단체와도 연대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의 법률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방송 강진원 간사는 “의회 차원의 행정수도완성특위 활동에 기대를 건다”며 “언론인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겠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큰 틀에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평석 위원은 “세종시가 탄생하기까지 언론의 도움이 컸다” 며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 고 밝혔다.

행정수도완성특위는 각종 매체와 연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타 시·도 의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행정수도 명문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릴 계획이다.

■ 주요 언론 보도 현황 (13개 언론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브레이크뉴스	2019.2.26.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출입기자단 간담회	
충청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행정수도의 법률적 지위 확보 노력	
대전투데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중도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간담회 통해 지향점 공유	
MBS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출입기자단 간담회	
세계타임즈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현대경제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뉴스충청인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특급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백제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한국인터넷 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세종nTV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충청신문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출입기자단 간담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div style="text-align: center;">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p style="margin: 0;">배포일시: 2019년 3월 7일(목)</p> </div>			
제 공 부 서	의 회 사 무 처 (행정복지위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이 익 수	☎ (044)300-7442
		주 무 관	박 현 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머리 맞대

시와 공조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설치
국회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 노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위)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수도완성특위는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 확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계각층을 망라한 20~30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수도완성특위는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여론 확산을 위해 전국 단위 행사 및 각종 축제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발표했다.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위 위원장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공조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국회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의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그 분원을 둔다’는 국회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윤형권 의원, 부위원장 박용희 의원, 위원 박성수·임채성·손인수·손현옥·채평석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 주요 언론 보도 현황 (15개 언론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뉴데일리	2019.3.7.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헌법 명문화 앞장	
충청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머리맞대	
아시아 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헌법 명문화 총력	
디트NEWS24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위', "헌법 명문화 앞장 서"	
충남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총력	
대전투데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머리맞대	
내외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앞장"	
천지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헌법 명문화에 앞장"	
중도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머리맞대	
브레이크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머리맞대	
브릿지경제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앞장	
세종방송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발 벗고 나서	
코리아플러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충남도민일보	2019.3.8.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일간투데이	2019.3.11.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머리 맞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div style="text-align: center;">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p style="margin: 0;">배포일시: 2019년 3월 22일(금)</p> </div>			
제 공 부 서	교육안전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오 두 혁 문 선 희	☎ (044)300-7517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의장 서금택)가 정부와 국회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8명의 의원 전원이 서명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윤형권 의원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41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하여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당위성을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서울에 상주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분절과 행정운영 비효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며 향후 건립될 세종 제3청사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형권 의원은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회 세종의사당 유치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하는 등 ‘행정수도 세종시’를 준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주요 언론 보도 현황 (32개 언론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충청뉴스	2019.3.22.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디트뉴스24	〃	세종시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 촉구	
아시아 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뉴데일리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계획 수립해야”	
연합뉴스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브레이크뉴스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즉각 세워야”	
굿모닝충청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즉각 세워야”	
천지일보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 촉구	
시선뉴스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티브로드	〃	[티브로드][세종]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 촉구”	
중도일보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세계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충청탐뉴스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촉구	
현대경제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세종방송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특급뉴스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백제뉴스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세종데일리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세계타임즈	〃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타임뉴스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금강일보	2019.3.24.	세종시의회 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동양일보	〃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충남일보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대전일보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중부매일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충청일보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금강일보	〃	세종시의회 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브릿지경제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촉구	
내외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MBS	〃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전국매일신문	2019.3.25.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즉각 수립하라”	
코리아플러스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수립하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div style="text-align: center;">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p style="margin: 0;">배포일시: 2019년 3월 27일(수)</p> </div>			
제 공 부 서	의 회 사 무 처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이익수	☎ (044)300-7442
		주 무 관	박현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는 熱功 中

28일 세종연구실 워크숍 참석 시민단체와 열띤 토론 예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의원·이하 행수특위) 위원들이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행수특위 위원들은 28일 오전 공주한옥마을에서 세종연구실이 주최하는 ‘행정수도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토론회’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과제도 발표한다.

위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중앙부처 추가 이전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에 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행수특위 위원들은 토론회에 참여하는 행정수도완성시민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정책적으로 연대하기로 하고, 오는 4월에 개최되는 국회토론회에 공조를 맞추기로 하는 등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활동을 함께 펼치기로 합의했다.



윤 위원장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행정수도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특위 위

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행수특위는 위원장 윤형권 의원과 부위원장 박용희 의원, 채평석, 박성수, 손현옥, 임채성, 손인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 주요 언론 보도 현황 (17개 언론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디트뉴스24	2019.3.27.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열공 중'	
충남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대 국민 공감대 확산 주력	
아시아 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 원회 정책개발 앞장	
뉴데일리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앞장...다양한 정책개발	
충청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 다양한 정책 개발 앞장	
대전투데이	〃	행정수도완성 위한 다양한 정책 개 발 앞장	
뉴스충청인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다양한 정책 개발에 앞장	
뉴데일리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앞장...다양한 정책개발	
세계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행정수도 기능강화 '열공'	
세계타임즈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는 熱功 中	
특급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는 熱功 中	
백제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는 열공 中	
타임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는 熱功 中!	
세종방송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전략 마련 돌입	
신아일보	2019.3.28.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정책연구과제 토론회 참가	
내외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행정수도 완성 '앞장' ...다양한 정책개발	
브릿지경제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가 정책개발 등 열띤 토론	

 <p>세종특별자치시의회</p>	<p>보 도 자 료</p> <p>배포일자: 2019년 4월 12일(금)</p> <p>**15일(월) 오후부터 보도 부탁드립니다.**</p>			
제 공 부 서	의 회 사 무 처 (행정복지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이 익 수	☎ (044)300-7440
		주 무 관	박 현 미	☎ (044)300-7442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15일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이하 행수특위)는 4월 15일 국회 앞 광장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고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일정에는 행수특위 위원들을 포함해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대거 동참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3월 22일 제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새로 건립되는 정부세종 3청사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 국회 방문은 결의안 채택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의원들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설치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대시민 홍보 퍼포먼스도 펼쳤다.

윤형권 위원장은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서 대통령이 서울에

상주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정운영의 분절현상과 행정운영 비효율 및 경제적 손실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지방과 국가가 상생 발전하기 위해 세종시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치권 확대 및 재정 특례가 강화되어야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국회사무처를 방문해 ‘국회 분원 설치 촉구 결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서금택 의장을 비롯한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 서명식을 열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민기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김중석 자치분권위 자치제도분과위원장,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가 세종시법 개정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주요 언론 보도 현황 (34개 언론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아시아 뉴스통신	2019.4.12.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특위, 15일 국회 퍼포먼스 예정	
천지일보	〃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촉구	
중부뉴스	〃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촉구하다.	
중부매일	2019.4.13.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촉구	
동양일보	2019.4.14.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촉구	
신아일보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중앙일보	2019.4.15.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시민 운동 확산	
브레이크뉴스	〃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집무 실 설치 촉구	
충청투데이	〃	세종시의회 대통령 집무실 촉구	
충청뉴스	〃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촉구	
아시아 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촉구	
충남일보	〃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촉구	
프레시안	〃	“세종시 명칭 ‘세종특별시’ 로”...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중부매일	〃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촉구	
브릿지경제	〃	세종시의회, 15일 국회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촉구 예정	
대전투데이	〃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촉구	
내외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서 '대 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브레이크뉴스	〃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촉구	
코리아플러스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세종시의회, 국회서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MBS	〃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촉구	
세계타임즈	〃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촉구	
특급뉴스	〃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촉구	
세종방송	〃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집무 실 설치 촉구	
충남도민일보	〃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촉구	
서울일보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타임뉴스	〃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촉구	
디트뉴스24	2019.4.16.	국회로 간 세종시의회...“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금강일보	〃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촉구	
브릿지경제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가 정책개발 등 열띤 토론	
세종의소리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로 간 세종시의회	
서울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국회 대통령 세종집 무실 설치 촉구	
현대경제	〃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촉구	
한국인터넷 뉴스	〃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촉구	
금강일보	〃	세종시의회, 국회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div style="text-align: center;">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p style="margin: 0;">배포일시: 2019년 8월 13일(화)</p> </div>			
제 공 부 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형권	☎ (044)300-7171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국회용역 결과 입장 발표

윤형권 특위위원장 연구용역 결과 존중 후속 조치 당부

13일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대해 33만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세종시의회는 “환영한다”면서도 설계비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아래 행정수도특위)는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담긴 △국회세종의사당 규모 및 대안별 비용 분석 △입지 검토 △종사자 정착방안 등이 실행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행정수도특위는 국회가 국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연구용역 결과)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세종시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청사 공무원의 서울(국회) 출장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따가운 지적을 받고 있다.

행수특위는 줄곧 “국회 세종 의사당에 예결위 설치 및 세종청사 입지 부처와 관련된 상임위 설치는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해왔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행수특위 윤형권 위원장은 “국회는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50억을 반영해야 세종의사당 설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실행을 재차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는 윤형권, 박용희, 채평석, 박성수, 손현옥, 임채성, 손인수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한편, 연구용역은 지난 1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6개월간의 용역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국토연구원이 맡아 수행했다.

■ 주요 언론 보도 현황 (20개 언론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뉴스1	2019.8.13.	세종시의회 “국회 분원 설계비 반영 등 후속조치 나서야”	
뉴데일리	〃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분원 설계비 확보 등 후속조치 ‘촉구’	
매일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국회 용역 결과 입장 발표	
아시아 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국회용역 환영 입장 발표	
아주경제	〃	[로컬 인사이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발표에 ‘환호’	
중도일보	〃	충청 정가, 국회 세종분원 이전 안 발표 ‘환영’	
충남투데이	〃	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국회 용역 결과 입장 발표	
내외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국회 용역 결과 입장 발표	
뉴스충청인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국회용역 결과 입장 발표	
세계타임즈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국회 용역 결과 입장 발표	
매일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국회 용역 결과 입장 발표	
특급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국회용역 결과 입장 발표	
백제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국회용역 결과 입장 발표	
MBS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국회용역 결과 입장 발표	
타임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국회용역 결과 입장 발표	
충남도민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국회용역 결과 입장	
충청뉴스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결과 ... 의 회 행정수도특위 ‘환영’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뉴스충청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국회용역 결과 입장 발표	
세종매일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국회 용역 결과 ‘환영’	
충청신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자문단 위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div style="text-align: center;">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p style="margin: 0;">배포일시: 2019년 8월 16일(금)</p> </div>			
제 공 부 서	의 회 사 무 처 (행정복지 전문위원)	행정부지전문위원	이 익 수	☎ (044)300-7442
		주 무 관	박 현 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식 개최

자문위원 11인, 행정수도완성 추진방향 및 현안에 대한 자문 수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16일 오전 10시 시의회 3층 의정실에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이하 행수특위)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행정수도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김중규(세종의소리 대표), 문인수(前화순군 부군수), 손영희(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안용준(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기(공주대 교수), 이상진(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임덕수(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임봉철(한국농촌지도자 세종시 연합회장), 임승달(前강릉대총장), 정연숙(매거진세종 대표), 최정수(한국영상대 교수) 등 총 11명이다.

자문위원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자문위원들은 행정수도완성 추진방향 및 현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금택 의장은 위촉식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오늘 위촉되신 자문위원들도 힘을 모아달라.” 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행수특위 윤형권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시 의회, 집행부, 시민단체 및 자문위원 등 각계 각층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 며 “특히 범충청권과의 공조가 꼭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방분권세종회의(舊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세종시청 실무지원단 등이 참석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간담회가 위촉식에 연이어 진행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주요 언론 보도 현황 (31개 언론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아시아 뉴스통신	2019.8.16.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	
매일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 회 자문단 위촉식 개최	
충청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자 문단 위촉	
티브로드	〃	[티브로드][세종]세종시의회, 행정 수도완성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	
연합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자 문위원 11명 위촉	
중부매일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 회 자문단 위촉식 개최	
대전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 회 자문단 위촉식 개최	
충청일보	〃	세종시행정수도 정착 민·관 역량 모은다	
충남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 회 자문단 위촉	
매일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 원회 자문단 위촉식 개최	
동양일보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자문단 위 촉식 개최	
대전투데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 원회 자문단 위촉식 개최	
금강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자 문단 위촉	
충청신문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자문단 위촉	
특급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자문단 위촉식 개최	
브레이크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 원회 자문단 위촉	
일간투데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 위원회 자문단’ 위촉	
브레이크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 원회 자문단 위촉식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세계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식	
백제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식	
세계타임즈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식 개최	
세종의소리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	
세종방송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자문위원 11명 위촉	
브릿지 경제신문	2019.8.17.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식	
충남도민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식	
뉴스충청인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식 개최	
MBS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식 개최	
타임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식 개최	
충청탐뉴스	2019.8.18.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식	
충청일보	〃	세종시행정수도 정착 민·관 역량 모은다	
중부뉴스	2019.8.19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식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div style="text-align: center;">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p style="margin: 0;">배포일시: 2019년 8월 19일(월)</p> </div>			
제 공 부 서	세종시의회행정수도 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형 권	☎ (044)300-7171

세종시의회 윤형권 위원장, 지방분권T/F 회의 참석 1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완성특위) 윤형권 위원장은 1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9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시도의회의 지방분권T/F 위원과 입법정책 전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에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시도의회 활동 보고 및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협의회 활동 상황 등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윤형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종시가 그 중심에 있는 만큼 최근 발표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 확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주요 언론 보도 현황 (17개 언론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동양일보	2019.8.19.	세종시의회 윤형권 행수특위 위원장, 지방분권T/F 회의 참석	
굿모닝충청	〃	시의회행정수도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19일 지방분권T/F 회의 참석	
대전일보	〃	세종시의회 윤형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충청뉴스	〃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위 위원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촉구	
충남일보	〃	세종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브릿지경제	〃	세종시의회 윤형권 행정수도특위 위원장, 지방분권T/F 회의 참석	
특급뉴스	〃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위 위원장, 지방분권T/F 회의 참석	
MBS	〃	세종시의회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위 위원장, 지방분권T/F 회의 참석	
뉴스충청인	〃	세종시의회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위 위원장, 지방분권T/F 회의 참석	
IPN뉴스	〃	세종시의회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위 위원장, 지방분권T/F 회의 참석	
세종nTV	〃	세종시의회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위 위원장, 지방분권T/F 회의 참석	
세계타임즈	〃	세종시의회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위 위원장, 지방분권T/F 회의 참석	
전국매일신문	〃	윤형권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위원장, 지방분권T/F 회의 참석	
백제뉴스	〃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 지방분권T/F 회의 참석	
천지일보	〃	세종시의회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위 위원장, 지방분권T/F 회의 참석	
일간투데이	〃	세종시의회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위 위원장, 지방분권T/F 회의 참석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세계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지방분권T/F 회의 참석	
금강일보	〃	국토균형발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대전일보	〃	세종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 정안 조속 통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19년 8월 22일(목)		
제 공 부 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특위위원장	윤형권	☎ (044) 300-7171
	-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주무관	박현미	☎ (044) 300-7442
	- 지방분권세종회의	지방분권세종회의 특별과제위원장 김수현		☎ 010-9068-3323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대안 B안의 범위에서 조속한 건립계획 확정 촉구

세종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 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이하 행정수도특위)는 22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용역 등의 후속조치를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방분권세종회의, 행정수도특위는 “국회는 연구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대안 중 B1~B3안의 범위에서 이전규모와 시기를 결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 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이전하는 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비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이전 규모와 함께 이전 시기도 명확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형권 행정수도특위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입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후속조치를 연내에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가 서울과 세종의 정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이다.”며 “20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 8월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2016년 6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것이다.

■ 주요 언론 보도 현황 (52개 언론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연합뉴스	2019.8.22.	세종 정치권·NGO, 국회 세종 분원 설치 후속 조치 촉구	
프레시안	〃	세종 정치권·시민단체,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후속조치 촉구	
한국일보	〃	세종 정치권·시민단체,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후속조치 촉구	
충청일보	〃	세종 정치권·NGO, 국회 세종 분원 설치 후속 조치 촉구	
매일일보	〃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대전일보	〃	세종정치권·시민단체,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이뉴스투데이	〃	행정수도특위,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 연내 확정해야”	
뉴데일리	〃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강력 촉구	
동양일보	〃	세종 시민단체·정치권 국회 세종의사당 후속조치 촉구	
디트뉴스24	〃	세종정치권·시민단체,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후속조치 이행 촉구”	
아시아 뉴스통신	〃	세종시의회-시민단체, 세종의사당 후속조치 이행 촉구	
충청뉴스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국회확정 촉구	
대전시티저널	〃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굿모닝충청	〃	세종시민사회·시의회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착수해야”	
충청투데이	〃	“국회 세종의사당 후속조치하라” 성명서 발표	
충남일보	〃	세종시민단체·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대전투데이	〃	세종시민단체·정치권 “국회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나서야”	
브릿지경제	〃	세종시의회-시민단체, 세종의사당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세계타임즈	〃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 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플러스코리아	〃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 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코리아플러스	〃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 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내외일보	〃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 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백제뉴스	〃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 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충남도민일보	〃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IPN뉴스	〃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 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매일일보	〃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현대경제	〃	세종시,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충청신문	〃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 조치 촉구	
MBS	〃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 조치 촉구	
충청투데이	〃	“국회 세종의사당 후속조치하라” 성명서 발표	
특급뉴스	〃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세계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충남일보	〃	세종시민단체,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뉴스충청인	〃	세종시 시민단체와 정치권,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뉴데일리	〃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강력 촉구	
전국매일신문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 후속조치하라”	
세종포스트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시민단체·정치권 한목소리	
동양뉴스통신	〃	국회 세종의사당 후속조치 연내 확정 촉구	
충청탐뉴스	〃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건립계획 확정 촉구 성명서 발표	
충청뉴스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국회 확정 촉구	
세종매일	〃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추진 열망 ‘고조’	
이뉴스투데이	〃	행정수도특위,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 연내 확정해야”	
세종의소리	〃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한 뜻.. “후속조치 속도 내야”	
세종방송	〃	‘국회 세종의사당, 상임위 내려오는 B안에서 빨리’	
대전시티저널	〃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세계타임즈	〃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 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충청타임즈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후속조치 촉구	
MBS	〃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 조치 촉구	
충청신문	〃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 조치 촉구	
코리아플러스	〃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 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IPN뉴스	〃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 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현대경제	〃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플러스코리아	2019.8.23.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 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div style="text-align: center;">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p style="margin: 0;">배포일시: 2019년 11월 5일(화)</p> </div>			
제 공 부 서	의 회 사 무 처 (행정복지 전문위원)	행정부지전문위원	이 익 수	☎ (044)300-7442
		주 무 관	박 현 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자문단 간담회 개최

5일, 특위 위원·자문단, 행정수도완성 추진상황 및 긴급 현안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5일 오전 11시 시의회 3층 의정실에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이하 행수특위)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0억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 내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추진되었다.

또한 행정수도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행정수도완성 관련 시책 전반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 촉구를 위해 11.6.(수)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수특위 윤형권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 설계비 10억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 내년도 예산안 문제사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이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2차 정례회에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건립 추진 촉구안’을 발의해, 세종시 의회 차원의 촉구활동을 추진하겠다. ” 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자문단은 행정수도완성 추진방향 및 현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을 위해 행정수도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올해 8월 구성됐다.

#붙임. 행수특위 자문단 간담회 사진 각 1부(별첨). 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19년 11월 6일(수)		
제 공 부 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위원장	윤 형 권	☎ (044) 300-7171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주무관	박 현 미	☎ (044) 300-7442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수현		☎ 010-9068-3323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내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6일 행정수도완성특위충청권공동대책위,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개최

충청권 시민단체와 세종시의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이하 행정수도특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준식, 이하 충청권공대위)는 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0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행정수도특위 및 충청권공대위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20년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 설계비 10억원이 포함된 것은 550만 충청인의 염원에 반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들은 자유한국당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에 적극 동의하고,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행정수도완성 대장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지난 10월 2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약속한 만큼, 초당적 논의와 협력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형권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추가 설계비용 10억 원은 단지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대의명분과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치권의 첫 걸음으로 상징되는 만큼 내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준식 충청권공대위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안보다 더 우수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 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비롯한 행정수도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당당하게 선택을 받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수도특위는 윤형권(위원장), 박용희(부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손현옥, 임채성, 채평석 의원 등 7인으로 구성되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충청권공대위는 지난 9월 충남도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세종시청에서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충청권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붙임. 기자회견 사진 & 기자회견문 추후 송부(별첨). 끝.

■ 주요 언론 보도 현황 (46개 언론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동양일보	2019.11.6.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디트뉴스24	〃	행정수도완성특위·충청권공대위...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이뉴스투데이	〃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드시 반영하라!”	
뉴데일리	〃	충청NGO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내년 국비 반영” 촉구	
브릿지경제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내년 예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브레이크뉴스	〃	세종시의회,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뉴시스	〃	행정수도완성특위 국회 기자회견	
뉴시스	〃	행정수도특위·충청권공대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반영하라	
중부매일	〃	내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충청뉴스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충청권 한 목소리	
굿모닝충청	〃	충청권 시민단체·세종시의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내년 예산 반영하라”	
대전일보	〃	세종시의회·충청권 시민단체,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반영 촉구	
뉴스웍스	〃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에 대해 한국당은 입장 밝혀라”	
중도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세종의사당 설계비 내년 예산 반영돼야”	
신아일보	〃	충청권 시민단체-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충청투데이	〃	충청권 시민단체·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꼭 필요”	
충남일보	〃	세종시의회, 내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티브로드	〃	[티브로드][세종]“국회 세종의사당 내년 예산 10억 반영 촉구“	
스트레이트뉴스	〃	“신축 국회 세종의사당, 내년 설계해야“	
천지일보	〃	세종시의회, 내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대전투데이	〃	“내년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해야“	
매일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내년 예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아시아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충청타임즈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수도 완성“	
국제뉴스	〃	세종시의회, 내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충남도민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특급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MBS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내년 예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세계타임즈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내년 예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세종nTV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내년 예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IPN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내년 예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충청신문	〃	행정수도완성 특위·충청권공동대책위,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중도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세종의사당 설계비 내년 예산 반영돼야“	
배방신문	〃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반영 촉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세계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내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충청타임즈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수도 완성”	
이뉴스투데이	〃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드시 반영하라!”	
충남도민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매일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내년 예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디트뉴스24	〃	행정수도완성특위·충청권공대위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내년 예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브릿지경제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내년 예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백제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내년 예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하라”	
중도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세종시의사당 설계비 내년 예산 반영돼야”	
천지일보	〃	세종시의회, 내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국제뉴스	〃	세종시의회, 내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세종매일	2019.11.11.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하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19년 11월 28일(목)		
제 공 부 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형 권	☎ (044) 300-7171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29일부터 열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균형발전 및 행정비효율 해소 위해 정상 추진돼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 10억 원의 반영 여부가 29일(금)부터 열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형권 의원과 부위원장 박용희 의원, 위원 손현옥 의원, 위원 임채성 의원은 28일 세종시청에서 2020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는 28일 현재 ‘20년도 정부예산에 대해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이하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20년도 정부예산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의 예산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소관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안대로 통과 되었으나, 14일에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류사업으로 분류된 상태다.

세종시는 11월 현재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나, 출범 초기부터 서울에 있

는 국회에 공무원의 잦은 출장 등으로 행정 비효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지난 2017년 대선 때 여야 모두 5명의 후보자 공약사항이었던 데다 최근 열린 국회토론에서도 본회의와 국회의장의 위치라는 본질적 기능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위헌 논란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이었다.

윤형권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충청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20년도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반영에 적극 동의하고,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행정수도완성 대장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박용희(자유한국당 소속) 부위원장은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균형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를 위해 국회방문 기자회견 및 촉구 결의안 채택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붙임.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사진 3부 (별첨). 끝.

■ 주요 언론 보도 현황 (33개 언론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뉴스1	2019.11.28.	시의회 행정수도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하라”	
프레스인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디트뉴스24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동양일보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대전일보	〃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해법 '온도차'	
중도일보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뉴데일리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분원 설계비 반영 ‘촉구’	
굿모닝충청	〃	'보류'된 국회세종의사당 예산, 살아날까	
충청뉴스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뉴시스	〃	“국회는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라”	
한국일보	〃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하라” ...여야 간 해법은 입장차	
티브로드	〃	[티브로드][세종]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천지일보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아주경제	〃	[로컬 정치] 여·야 의원들이 속한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결집된 목소리	
대전투데이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아시아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국제뉴스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금강일보	〃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국제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로컬투데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하라”	
국토매일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세종방송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MBS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세계타임즈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세계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백제뉴스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기자회견...“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세종nTV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충청신문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뉴스충청인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동양일보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특급뉴스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충남도민일보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금강일보	〃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div style="text-align: center;">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p style="margin: 0;">배포일시 : 2019년 12월 4일(수)</p> </div>			
제 공 부 서	의 회 사 무 처 (행 정 복 지 전 문 위 원 실)	전 문 위 원	이 익 수	☎ (044) 300-7442
		주 무 관	박 현 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행정수도완성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의결 및 행정정수도완성 추진계획 청취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이하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4일 오후 2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윤형권 위원장을 비롯 특위위원 6명과 시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복지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행정수도완성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과 집행부의 내년도 행정수도완성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는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18년 11월에 구성된 이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19.3월), 국회 연구용역 결과 이행 촉구 성명서 발표('19.8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으며('19.11월),

또한, 국회 정론관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19.11월) 개최, 국회사무처 및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실을 방문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촉구 건의문 전달('19.11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현안과제들이 완료되지 않았고, 세종시 및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제3대 후반기 원 구성을 고려해 활동기

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특위 위원들이 뜻을 모았다.

이어 세종시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집행부의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19년도 추진실적과 '20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윤형권 위원장은 “ '20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반영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라며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세종시 현안과제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의회, 집행부 등 각계각층의 역량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가자.” 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윤형권, 박용희, 채평석, 박성수, 손현옥, 임채성, 손인수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붙임.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사진 2부(별첨). 끝.

■ 주요 언론 보도 현황 (24개 언론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뉴시스	2019.12.4.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제3차 회의 개최	
뉴데일리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의결’	
대전일보	〃	“행정수도 완성 위해 끝 까지 힘 모은다“	
충도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활동 6개월 연장	
브릿지경제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브레이크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충청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아시아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특급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제3차 회의 개최	
로컬투데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천지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MBS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세계타임즈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충청답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대전투데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국제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특급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제3차 회의 개최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충청신문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 제3차 회의 개최	
브릿지경제 신문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 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백제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활 동기간 연장안 의결	
세종방송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활 동기간 6개월 연장	
중도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활 동 6개월 연장	
충남도민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 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p style="text-align: center;">배포일자 : 2020년 1월 22일(수)</p>			
제 공 부 서	의 회 사 무 처 (행 정 복 지 전 문 위 원)	전 문 위 원	김 영 인	☎ (044) 300-7442
		주 무 관	박 현 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올해 6월 말까지 채평석 신임 위원장 체제로 재편...신년 활동 재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2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채평석 의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9일 윤형권 행정수도완성 특위 위원장의의원직 사퇴로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열렸다. 그 결과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시민사회와 공조를 통한 원활한 계획 추진을 위해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채평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채평석 신임 위원장과 박용희 부위원장, 박성수·손인수·손현욱·임채성 위원 등 총 6명으로 재편되었으며, 올해 6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채평석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동료 위원들과 함께 세종시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사진 3부(별첨). 끝.

■ 주요 언론 보도 현황 (24개 언론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대전일보	2020.1.22.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장에 채평석 의원	
뉴스핍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채평석 신임 위원장 체제로 개편	
브릿지경제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브레이크뉴스	〃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행정수도 완성 특위위원장 선임	
충남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신임 위원장에 채평석 의원	
아시아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장에 채평석 의원	
국제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특급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제4차 회의 개최	
MBS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충남도민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세계타임즈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IPN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뉴스충청인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세종방송	〃	채평석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위원장 선출	
뉴스핍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채평석 신임 위원장 체제로 개편	
백제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채평석 신임 위원장 체제로 재편	
세종의소리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특위, 채평석 신임 위원장 선출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천지일보	2020.1.23.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채평석 신임 위원장 선출	
디트뉴스24	〃	채평석 의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특위 위원장' 선출	
충청뉴스	〃	채평석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출	
충청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채평석 신임 위원장 선출	
충청신문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신임 위원장 체제로 재편	
코리아플러스	2020.2.2.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p style="text-align: center;">배포일자 : 2020년 3월 30일(월)</p>		
제 공 부 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 지방분권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특위위원장	채평석	☎ (044) 300-7130
		주무관	박현미	☎ (044) 300-7442
		지방분권세종회의 특별과제위원장 김수현		☎ 010-9068-3323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 지방분권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에 행정수도 공약 수립과 이행계획 제시 촉구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행정수도 완성’ 정책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이하 행정수도 특위)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 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는 30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행정수도 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 정책을 총선 공약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각 정당에 제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종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채평석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며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제시한 핵심 공약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정책이 누락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고 강조했다.

또한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여야는 2012년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선거가 끝나면 행정수도 공약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며 “각 정당 및 후보자는 당리당락을 떠나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대적 과업이자 국민들의 요구인 행정수도 완성 이행을 공약 및 정책에 반영해 달라” 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 의회 공식 SNS 채널(페이스북, 유튜브)을 통해 생중계됐다.



#붙임. 성명서 1부 & 성명서 발표 사진 2부 (별첨). 끝.

■ 주요 언론 보도 현황 (49개 언론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대전MBC	2020.3.30.	세종시 정치권·NGO “행정수도 완성을 총선 공약으로”	
kbs	〃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 마련하라”	
연합뉴스	〃	세종시 정치권·NGO “행정수도 완성을 총선 공약으로”	
뉴스1	〃	세종시의회·시민단체, 총선 후보들에 ‘행정수도 완성’ 공약 촉구	
한국일보	〃	세종시의회·시민단체 “행정수도 완성 총선 공약으로”	
세종포스트	〃	외면받은 ‘세종시=행정수도’ 공약, 이번 총선은?	
매일일보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지방분권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대전일보	〃	“행정수도 완성 공약 걸어라”	
대전일보	〃	행정수도 디딤돌 ‘세종시 3법’, 방기 안돼	
뉴스핍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	
동양일보	〃	세종 여야 후보 공약에 행정수도 완성 정책 실종	
내외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중부매일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총선 후보자들에 행정수도 완성 공약 주문	
브릿지경제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및 지방분권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세종의소리	〃	실종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공약 반영하라”	
충청뉴스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지방분권세종회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 반영 촉구	
중도일보	〃	“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 의지 보여야” 세종 여론화 움직임	
충청투데이	〃	세종 시민단체 “행정수도 완성 총선 공약 반영해야”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충남일보	2020.3.30.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 지방분권 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충청일보	〃	‘행정수도완성 정책’, 4·15 총선 공약 반영 촉구	
대전투데이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 지방분 권세종회의, “행정수도 완성 총 선공약 채택해야...	
티브로드	〃	[티브로드][세종]“행정수도 완성 정 책 제시해야”..정치권·시민단체 한목소리	
충청타임즈	〃	“‘행정수도 완성’ 정책공약 반영을	
국제뉴스	〃	세종시,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 에 행정수도 공약 수립과 이행계 획 제시 촉구	
아시아뉴스통 신	〃	세종시의회 시민단체, ‘행정수도 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천지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일간투데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정책’총 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세계뉴스통신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정 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특급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IPN뉴스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정 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코리아플러스	〃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세종방송	〃	‘행정수도 완성 정책, 총선 공약 에 반영하라’	
충청신문	〃	‘행정수도 완성’ 정책 총선 공약 에 반영 하라	
충청타임즈	〃	“ ‘행정수도 완성’ 정책공약 반 영을”	
세계타임즈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 지방분권 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미디어투데이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 지방분권 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뉴스충청인	2020.3.30.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 지방분권 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MBS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 지방분권 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백제뉴스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 지방분권 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충남일보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 지방분권 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중부뉴스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 지방분권 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내외일보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 지방분권 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타임뉴스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 지방분권 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 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충청탐뉴스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 지방분권 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 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코리아플러스	〃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세종방송	〃	‘행정수도 완성 정책, 총선 공약 에 반영하라’	
세종nTV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 지방분권 세종회의,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 에 행정수도 공약 수립과 이행계 획 제시 촉구	
뉴데일리	〃	김병준 후보 “세종 행정수도완 성 ‘정책공약’ 환영”	
국제뉴스	〃	세종을 김병준후보, 세종시의회 행 정수도완성특위 등 성명 관련 적 극 수용키로	
금강일보	2020.4.8.	행정수도완성 책임자 찾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20년 6월 1일(월)		
제 공 부 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위원장	채평석	☎ (044) 300-7130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주무관	박현미	☎ (044) 300-7442
	- 지방분권세종회의	지방분권세종회의 대변인 김수현		☎ 010-9068-3323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 지방분권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 촉구 성명서 발표

1일, 세종시청서 ‘21대 국회에 바란다’ 제안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1대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이하 행정수도 특위)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 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는 1일 세종시청 정읍실에서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는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반드시 실천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시민 약속이행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이 있다. 21대 총선 여·야 후보자들 역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이들 단체는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채평석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후 후속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지방을 살리는 국회’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후반기에 접어드는 향후 2년이 시대적 과업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대장정에 사생결단의 의지로 결연히 나서야 한다”며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정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지난 3월 30일,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정책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붙임. 성명서 1부 & 성명서 발표 사진 2부 (별첨). 끝.

■ 주요 언론 보도 현황 [34개 언론사]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MBC	2020.6.1.	세종 정치권·시민단체 “21대 국회 행정수도 개헌 추진”	
KBS	〃	21대 국회 시작..’충청권 정치력’ 시험대	
연합뉴스	〃	세종 정치권·시민단체 “21대 국회 행정수도 개헌 추진해야”	
한국일보	〃	21대 국회는 ‘행정수도 개헌’ 추진하라”...세종 정치권·시민단체 촉구	
뉴시픽	〃	세종시 정치권·시민단체 “21대 국회는 행정수도 개헌 추진하라”	
국제뉴스	〃	‘21대 국회에 바란다’ 행정수도완성 정책공약 이행 촉구	
천지일보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 촉구... ‘21대 국회에 바란다’	
대전일보	〃	21대 국회,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행 하라	
디트뉴스24	〃	세종시 정치권·시민단체 ‘행정수도 완성’ 한 목소리	
대전시티저널	〃	세종시의회-시민단체 행정수도 개헌 촉구	
세종의 소리	〃	세종시 정치권, 21대 국회 ‘행정수도 완성’ 촉구	
대전투데이	〃	세종시 정치권·시민단체 “21대 국회 행정수도 완성 정책 내놔야”	
굿모닝충청	〃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 국회 행정수도 완성 이행 촉구 맞손	
굿모닝충청	〃	“선거때만 요란했던 ‘행정수도 완성’ ...21대 국회 달라야”	
충청투데이	〃	세종시 정치권·시민단체 “행정수도 개헌 추진하라”	
중도일보	〃	“21대 국회 균형발전·지방분권 골든타임”	
아시아뉴스통신	〃	세종 정치권·시민단체, “21대 국회 행정수도 개헌 추진” 촉구	
아시아뉴스통신	〃	[아토포토] 행정수도완성정책 공약이행 촉구 성명 발표	

언론사	보도날짜	기 사 명	비고
sbn뉴스	〃	【정가】 세종시의회·시민단체, “21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지켜라”	
MBS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지방분권세종회의, “21대 국회에 바란다”	
이뉴스투데이	〃	세종시의회 행특위, ‘행정수도완성 공약’ 이행 촉구	
특급뉴스	〃	세종시의회행수특위·지방분권세종회의, 행수완성 촉구	
세종방송	〃	21대 국회,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완성의 ‘적기’	
세종매일	〃	세종시의회·시민단체 ‘행정수도완성’ 촉구	
충청뉴스	〃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 국회 행정수도완성 이행 촉구 맞손	
로컬투데이	〃	세종 정치권·시민단체 “21대 국회, 출범 취지대로 세종시 행정수도완성 촉구”	
국제뉴스	〃	‘21대 국회에 바란다’ 행정수도완성 정책공약 이행 촉구	
국제뉴스	〃	[성명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	
굿모닝충청	〃	“선거때만 요란했던 ‘행정수도완성’ ...21대 국회 달라야”	
중도일보	〃	“21대 국회 균형발전·지방분권 골든타임”	
내외일보	〃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35만 세종시민 대표해 기자회견	
대전인터넷신문	〃	21대 국회는 행정수도완성 정책공약을 이행하라,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 세종회의 공동 성명 발표	
백제뉴스	〃	“21대 국회, 행정수도완성 공약이행 하라”	
대전시티저널	〃	세종시의회-시민단체 행정수도개헌 촉구	



2.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

2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방안 논의



2019. 9. 20. (금) 15:00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

- 발제** 강현수 | 국토연구원 원장
조판기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좌장** 안성호 |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 토론** 진승호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단장
박무익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김진국 | 중앙일보 대기자
윤수정 | 공주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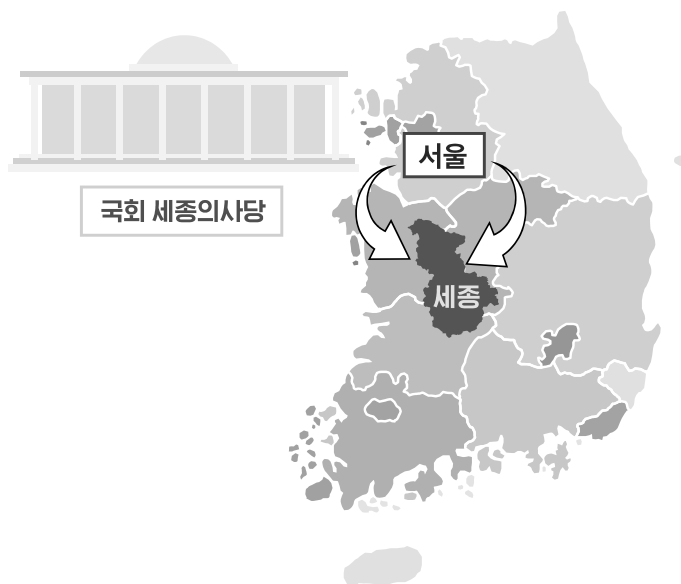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박병석) 주관 | 세종특별자치시 후원 | 중앙일보

발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차례 contents

I. 연구의 개요

II. 연계업무 분석

III. 이전 대상 기능·기관 선정 및 운영방안

IV. 분원 설치 추진 전략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국회 세종시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7년 하반기 시행한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의 후속 연구
- 업무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이전 대상기관의 선정, 국회분원 운영방안 마련, 절차 등에 관한 검토 및 추진방안 마련 필요

■ 연구의 목적

- 국회 기관별 직무 분석 및 업무실태 분석을 통해 **이전대상 기능·기관을 선정**하고 **국회분원의 개념 및 새로운 국회 운영방안**을 마련
 - ① 이전 대상기관 선정
 - ② 운영방안 마련 및 이전대상 기능·기관 제안
 - ③ 규모, 주요시설, 근무인력 및 지원정주대책 마련
 - ④ 이전 절차·비용 검토 및 파급효과 추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Ⅰ Ⅱ Ⅲ Ⅳ

연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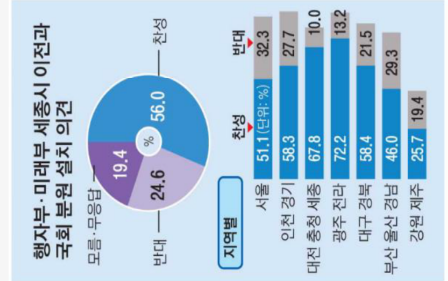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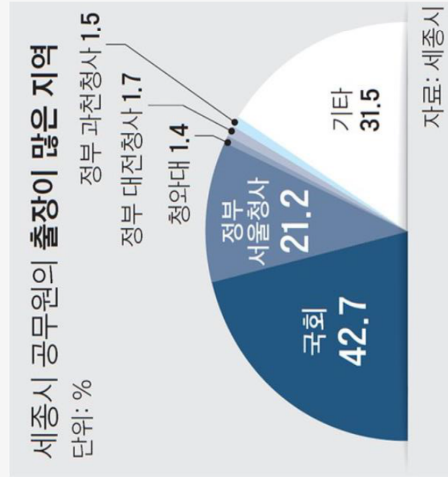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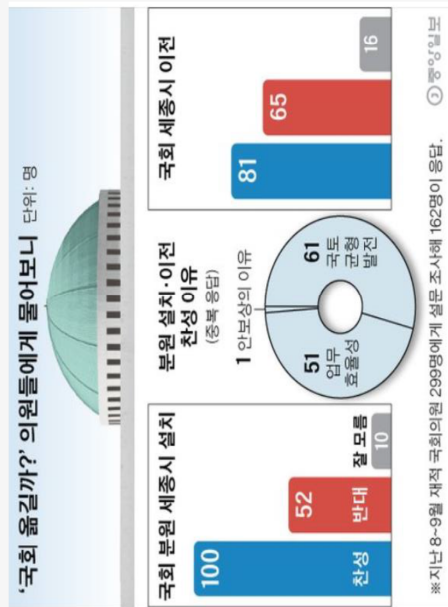
연구의 필요성

-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의 후속 연구의 필요성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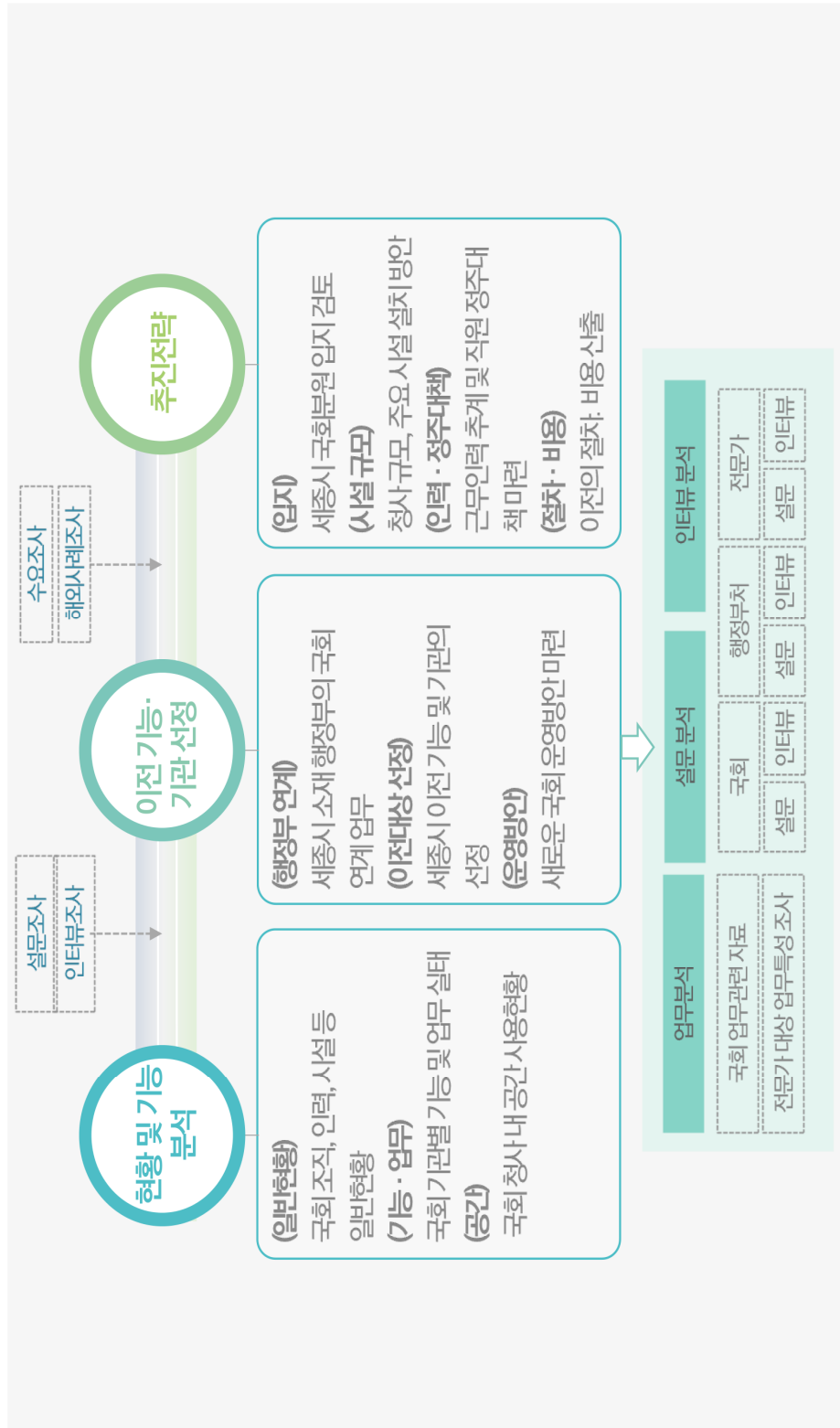
- 분원의 규모 및 이전 대상의 범위에 따라 위한성 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향후 분원의 규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 및 합의의 필요성 존재
- 분원 설치는 완성된 대안이 아닌 임시 교육책이며, 개원을 통한 완전 이전 논의가 선행된 후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택으로 분원 설치를 고려하는 다수 전문가·실무자들의 의견 제기
-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신중한 단계적 접근 필요

- 물리적 이격으로 인한 비효율과 국회분원 관련 여론 동향



2 연구의 내용 및 흐름

■ 연구의 내용 및 흐름





Ⅱ. 연계업무 분석

7

1 설문 및 인터뷰 분석

I | II | III | IV

연계업무분석

설문 개요

- 국회 설문 : 2019년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국회 소속 공무원 대상
- 행정부처 설문 :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5급 이상) 대상
- 전문가 설문 :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대학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 28명 대상

인터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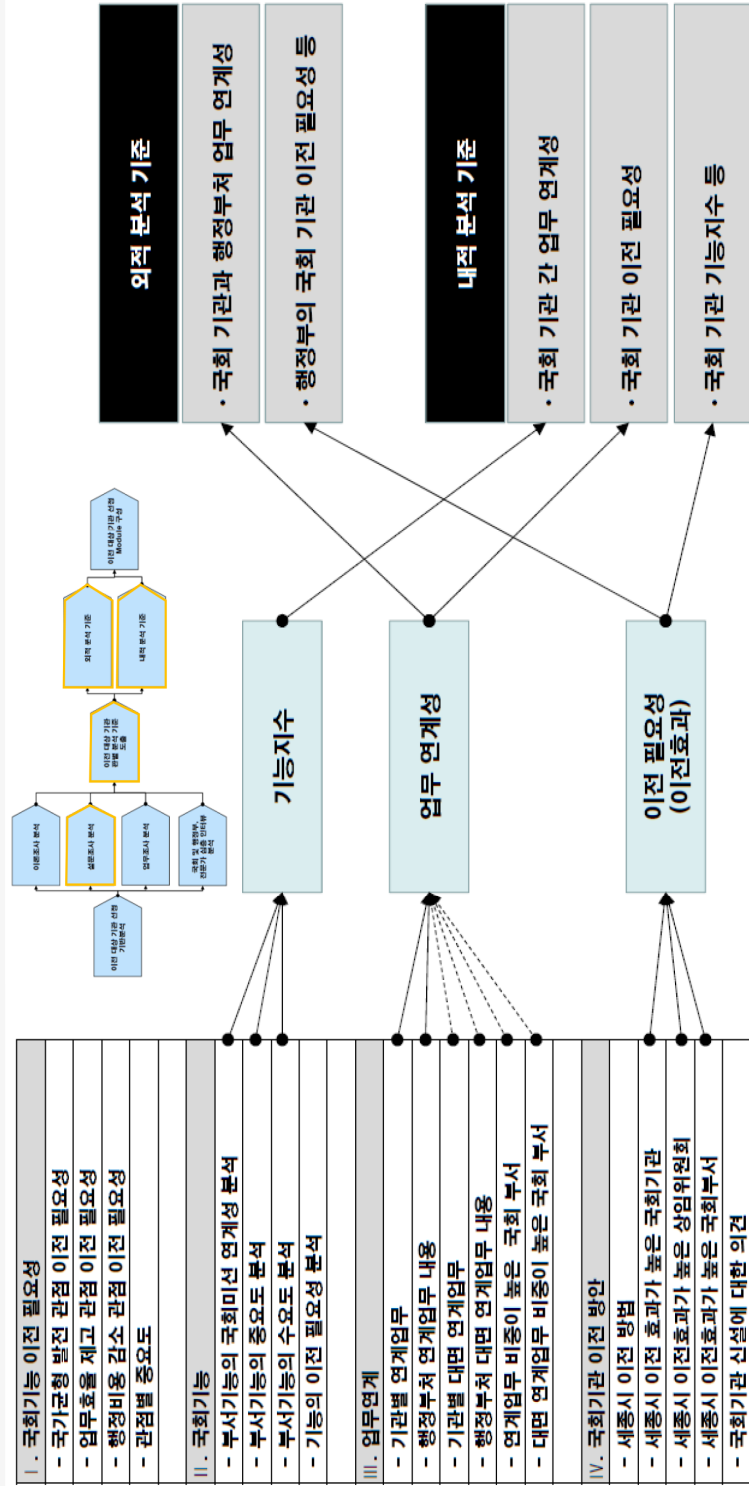
- 국회 : 2019년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국회 소속 공무원 12명 대상
- 행정부처 :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0명 대상
- 전문가 : 2019년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법학, 행정학, 도시계획학과,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전공 교수 및 연구위원 6명을 대상

1 설문 및 인터뷰 분석

|| || || || IV
연계업무분석

설문 분석의 사용

- 설문을 통해 국회 기관 기능지수, 업무연계성, 이전필요성(효과)등을 도출
- 도출된 기능지수, 업무연계성, 이전필요성은 국회 외적 요인과 내적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석 기준을 구성



1

설문 및 인터뷰 분석

연계업무분석

인터뷰 내용

- 행정부처
세종시 소재 10개 부처 소속 공무원 인터뷰 내용의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

1. 업무 비교율	국회-행정부처 접촉빈도	평균적으로 월 10회 (주 2-3회) 상임위, 국감, 청문회 시점 : 1주일씩 숙박, 주4회 이상 국감시 60-70명씩 이동 업무보고시 1000만원/회, 120명 이동
	비교율 내용	★비교율 매우 심각 출장비용, 예산 낭비 시간적 비효율성으로 정책결정 지연 ↳ 30분 설명을 위해 하루 전체 소요 직원 소통부재와 충분한 의사결정시간 부족 : 의사결정 품질 저하 직원 교육시간 부족
2. 국회 이전 효과	①업무효율제고	②행정비용감소 ③국가균형발전 순으로 효과 기대
	기능	기능의 중요도 : ①법률안 ②현안보고 ③예결산 ④국정감사 ↳ 업무현안보고, 법안이 연동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예결산은 일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으나 법률안은 수시적
3. 이전대상	기관	입법 이전 선행 상임위 + 예결위 + 지원기관(사무처 연관부서,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 이전 ↳ 상임위/예결위 이전시 의원직무실(의원화관) 유무가 가장 중요 출장소 개념의 분원은 의미없음 : 이중보고 부담 가중



과학기술
인재개발

- **국회** : 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상임위원회, 도서관 소속 직원 인터뷰, 도서관우드클라우드 분석결과



	<p>상임위원회(예결위) 예산정책처 >> 입법조사처 >> 국회사무처 >> 국회도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결산 : 시·군 전축(spot)성 회의, 회의 전 사전 미팅) - 법률안 : 1년 내내 상시 접촉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사무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의과의 관계가 많음 / 법제연구분석과는 국회법 연구기관으로 기관 내 타과 협력업무가 많음 예산정책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실(국회의원 보좌관) 관계가 많음 / 예결산 분석시즌에 행정부처 접촉이 많음 - 분석/상사 시는 행정부처 → 국회 / 국회 예산 신청시 국회(예정치)사무처 기획예산담당관) → 행정부처(기재부) 입법조사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처 공무원과 접촉 거의 없음 / 국회의원과과의 관계 : 조사회담 / 비대면접촉이 다수 국회도서관 - 행정부처 연계 거의 없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처 접촉빈도 매우 높음 - 예결산시 공식적 검토 설명 부차별 1회, 조사관 추가자료 요구 혹은 부처의 대면설명 요청으로 자주 있는 편 상임위원회 - 심사시 행정부처 접촉 있음 <p>★ 비효율 발생 국회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 질/양/속도 저하로 인한 업무비효율 / 소통의 문제 발생 / 행정부처 피드백지연 / 정책결정 지연 - 시간/비용 측면 불균형 있음
비효율 내용	<p>입부 이전은 입법부 내부 소통비효율 초래 / 위원회 내 기능별 이전 불가함</p> <p>국회간 행정부처 이전에 없던 자원기간 이전은 무의미</p> <p>국가권력분립 관점에서 효율성 제고 효과보다는 상징적 효과, 트러거 효과 측면 기대</p>
기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사무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처 연계적이 일부기는 이전 효과 마비/기관 신설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 상징적 효과 클 것 / 연구기관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자는 행정부처 연계 높은 편이라 업무효율성 높을 수 있음/ 입조차는 의원실 질의회담 온라인으로 가능 미래연구원 이전 기능 국회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처 연계성 적어 효율성 제고효과 없음 / 단, 대민서비스 측면검토 / 부산분원 건설중(5/17 착공식) 상임위원회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본질적인 기능으로 상임위원회 이전이 현제위원의 해석 기능 - 국회 '회의체' 의 성격, '회의체'의 당사자인 국회의원 분리가 기능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 필요 겸임위원회 + 국회의원의 정당활동으로 인한 시·서울+세종 비효율 증가 위원회 구성설 1~2년마다 변경되므로 의원실+보좌진 등 이동 상임위-보사위-본회의가 하루만에 진행되는 법안이 있을 시 서울-세종 이격 비효율 증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예산결산 시온제는 운영되고 있음/비효율 / 예결위와 상임위의 격차원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개선대상	<p>2. 입법대장</p>

2 연계업무 분석

연계업무분석

STE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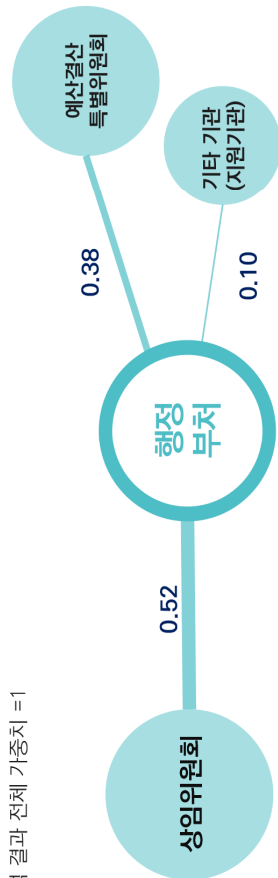
•국회 기관별 기능지수 도출

- 국회 기관 부서별 주요 업무분석시 문헌·자료조사 및 설문·인터뷰 분석을 통하여 기관별 기능지수와 업무연계 도출
- ※ 기능지수는 설문을 바탕으로 국회 기관 부서의 미션연계성, 중요도, 수요도의 평균값으로 도출
- 기능지수와 업무연계를 종합하여 기관별/부서별 이전 고려

높음		낮음	
깊	단	단	깊
2순위	1순위	4순위	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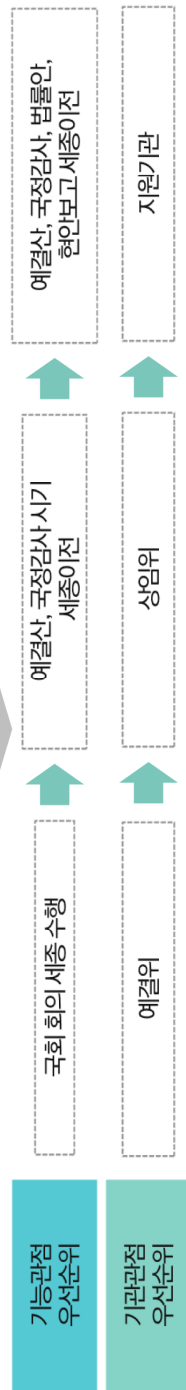
• 국회의 기능 및 기관관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지원기관) 이전 우선순위 도출

※ AHP분석 결과 전체 가중치 = 1



•인터뷰 분석 결과

- 예산·결산 및 국정감사 기능은 특정기간 개최, 법률안·업무 현안보고는 상시 개최
- 상임위 이전시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진, 지원기관 등 기능 및 인력 이전 필요
- 행정부처의 국회 회의 참석시 100여명의 출장 필요
- 이전 없이 국회에서 개최되는 회의만 세종에서 수행하는 방안 검토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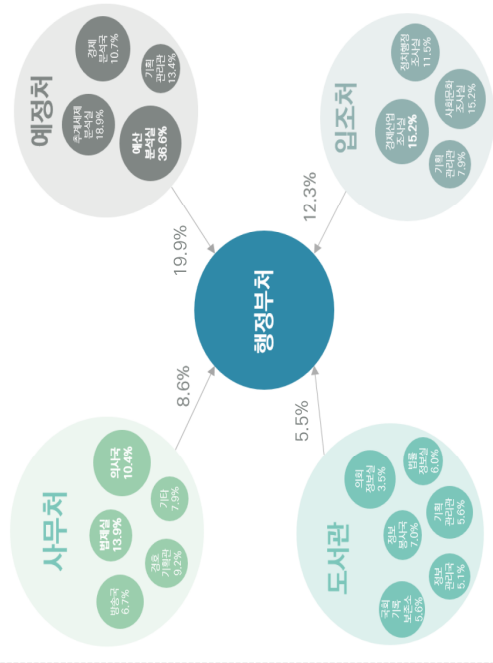
2 연계업무 분석

연계업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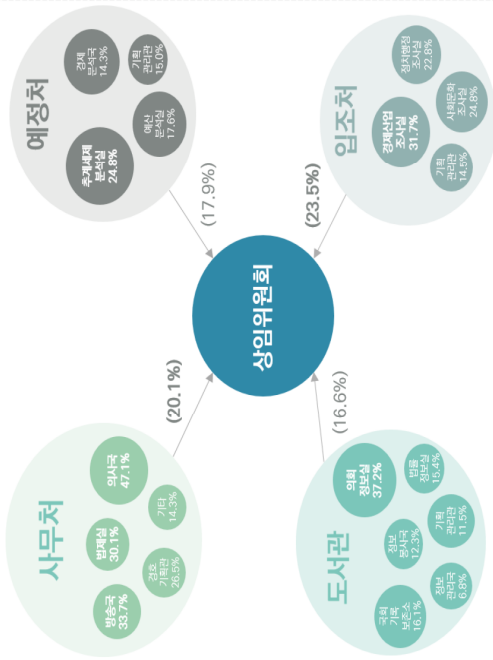
- 지원기관(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의 이전 우선순위 도출

도표분석 (예시) 국회사무처의 업무가 100%일 때, 그 중 행정부처와의 연계업무는 8.6%이고 상임위원회의 연계업무는 20.1% 임
예산정책처의 업무가 100%일 때, 그 중 행정부처와의 연계업무는 19.9%이고 상임위원회의 연계업무는 17.9%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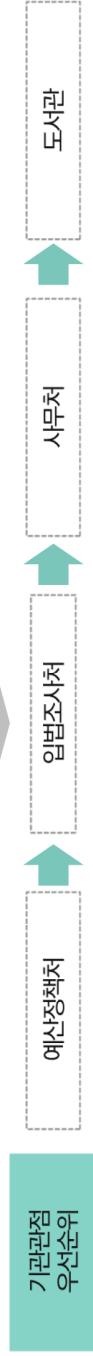
지원기관의 행정부처와의 업무연계



지원기관의 상임위원회의 업무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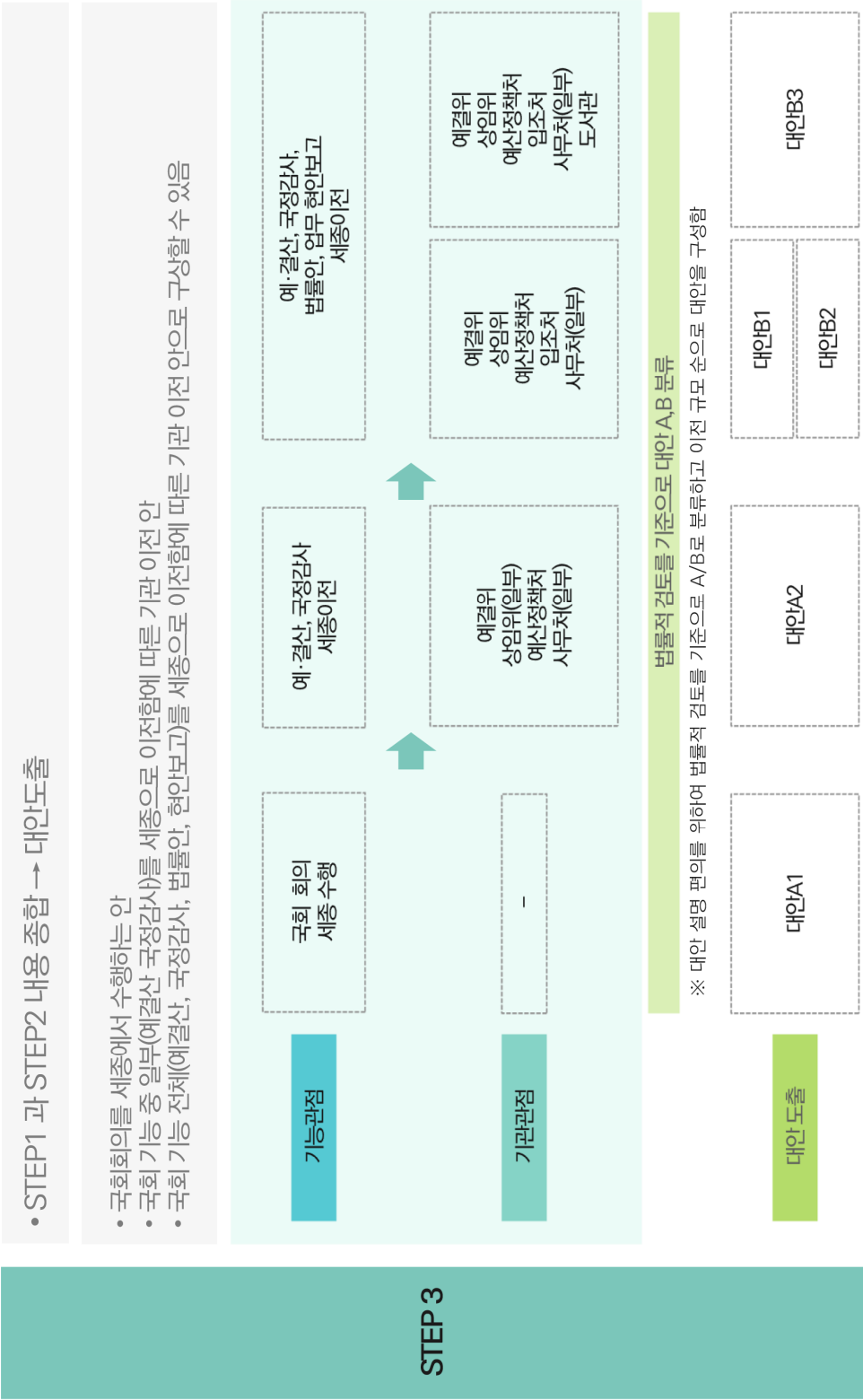


- 지리적 근접성 이론 및 시간 압박성 이론에 따라 업무효율을 제고하려면 연계업무가 높은 기관 간에 지리적으로 근접할 필요
- 각 기관별 상임위와 행정부처 연계업무 합계
- 예산정책처(37.8%), 입조처(35.8%), 사무처(28.6%), 도서관(22.0%) 순으로 나타남



2 연계업무 분석

II | III | IV
연계업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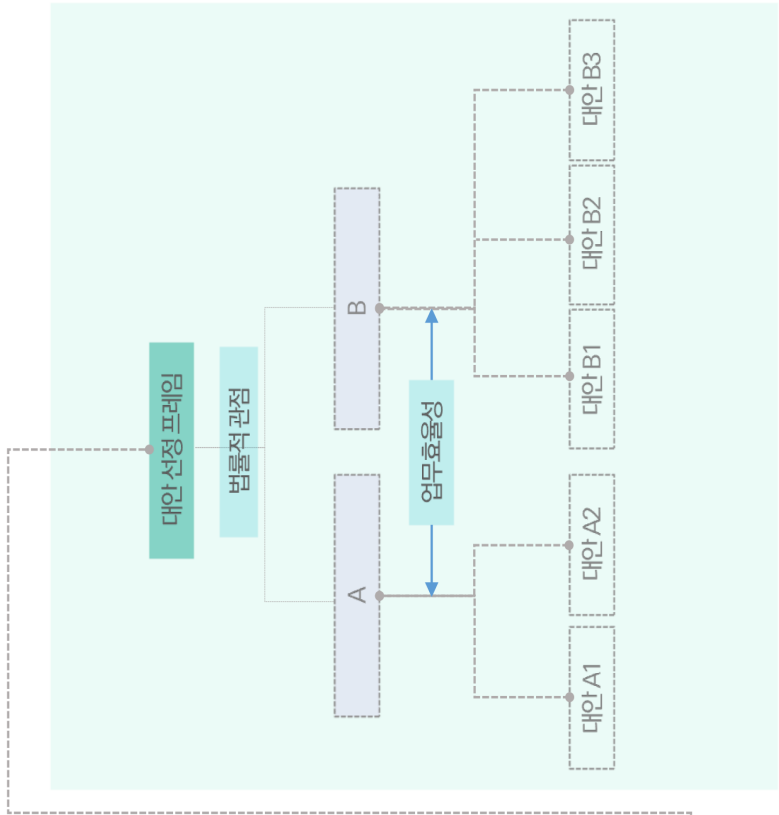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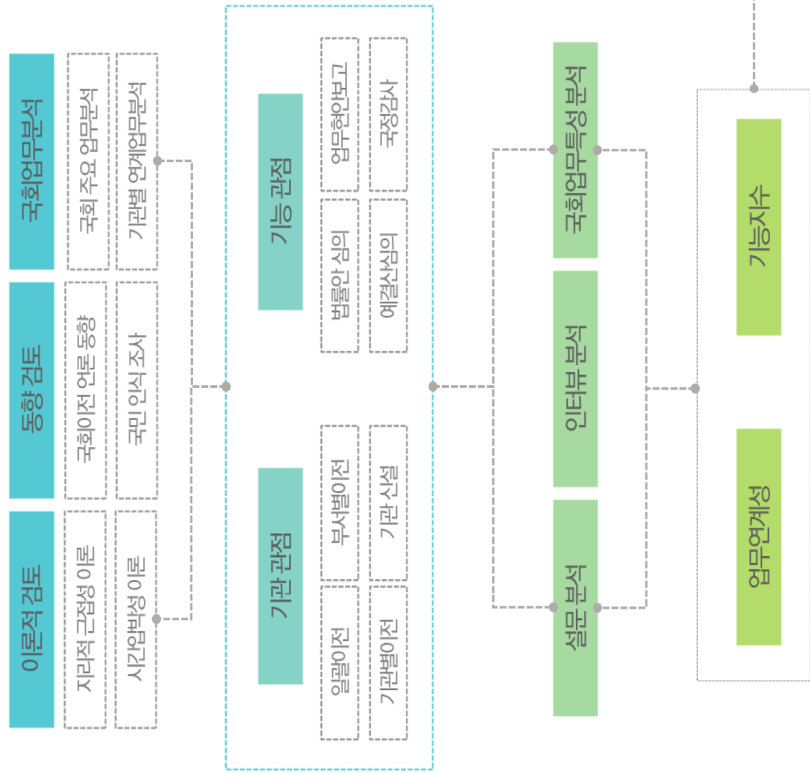


Ⅲ. 이전대상 기능·기관 선정 및 운영방안

1 대안 도출 기준

이전 대상기능·기관 선정 및 운영방안

대안 도출 프레임



2 국회보원 대안

|| || || || IV

이전 대상기능·기관 선정 및 운영방안

구분	현재	대안 A1	대안 A2	대안 B1	대안 B2	대안 B3
기능	국정감사 (세종출장)	국회 세종 종합회의실 설치	예·결산/국정감사 세종개최를 위한 지원기관(예정처, 사무처 일부) 이전	상임위(10), 예결위 이전 관련 지원기관(예정처, 입조처, 사무처 일부) 이전	상임위(13), 예결위 이전 관련 지원기관(예정처, 입조처, 사무처 일부) 이전	상임위(17), 예결위 및 연구기관·지원기관(예정처, 입조처, 사무처 일부) 이전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결산안 심사 업무 현안보고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결산안 심사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결산안 심사 업무 현안보고 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결산안 심사 업무 현안보고 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결산안 심사 업무 현안보고 법률안 심사
기관	출장	예결위 출장 상임위 출장 사무처 출장	예결위 소속의원 출장 상임위 출장			
			예결위 소속 공무원 예정처 사무처 일부 (의정기록과 일부)	예결위 상임위(10) 예정처 사무처 일부 (의정기록과) 입조처	예결위 상임위(13) 예정처 사무처 일부 (법제실, 의정기록과) 입조처	예결위 상임위(17) 예정처 사무처 일부 (법제실, 의정기록과) 입조처 미래연구소 / 도서관
차이	회의실만 설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의예비종합심사세종에서 수행 모든 인에서 국회 이전으로 인한 경 호, 방호시설 등 상시로 필요한 지 원기능을 신설했을 전제하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 된 상임위(외교위, 국방위, 정보위) 와 기타 상임위(국회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여위) 만 남기고 세종으 로 이전	B1/B2안은 상임위의 차이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 된 상임위(외교위, 국방위, 정보 위) 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위(17개)와 예 결위를 모두 세종에서 수행 연구기관·성격을 갖는 법제실, 입조 처, 예정처, 미래연구소, 도서관을 모두 세종으로 이전(도서관의 경우 신설)
		42,002㎡	45,874㎡	122,376㎡	139,188㎡	199,426㎡
분원 규모	-					

※ 본 연구에서 연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동일비율(1:1)로 보고 적용함(기밀)

※ 전용면적은 이전 인력에 따른 사무실·회의실과 같은 업무공간 면적의 합, 공용면적은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을 포함하며, 주차장, 기계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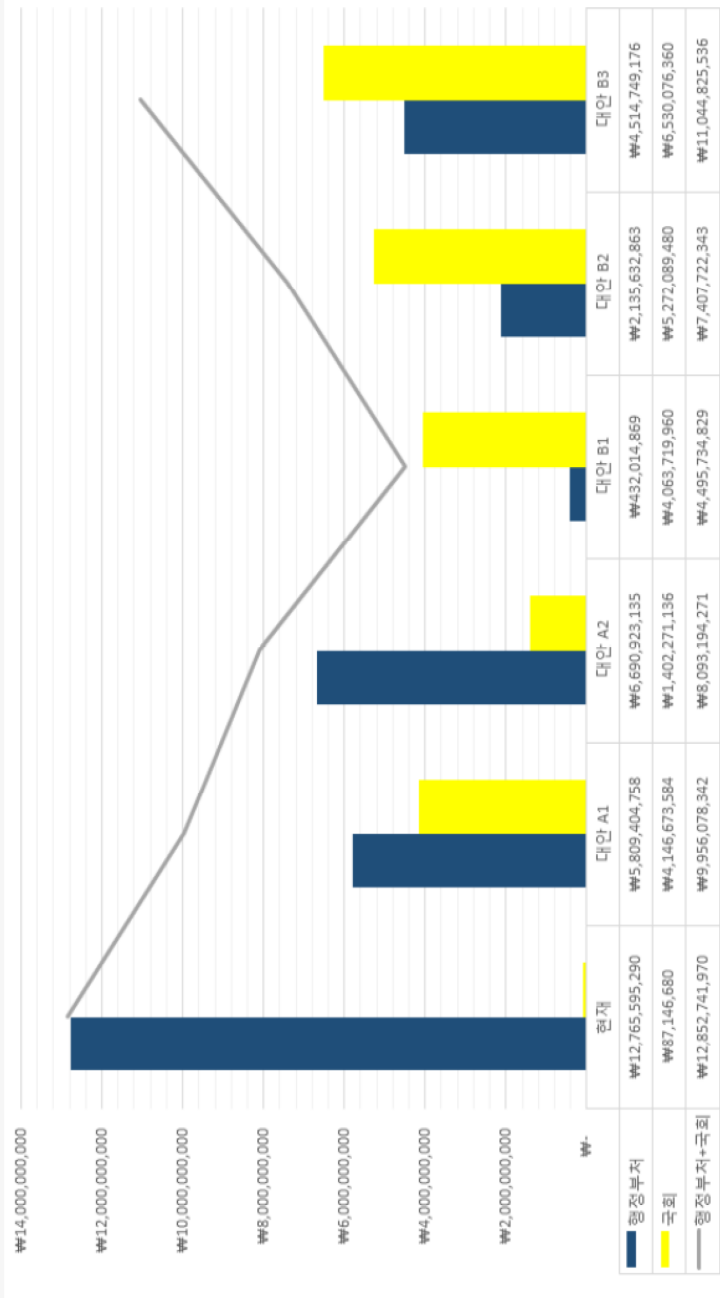
III | III | IV

이전 대상기능·기관 선정 및 운영방안

3 대안별 업무 비효율비용 검토

대안별 출장 소요 비용 그래프

대안별 출장소요비용은 대안 도출 전제에서 제시했던 전체 업무효율 그래프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과정이자 대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각 대안별 국회의 출장비와 행정부처의 출장비, 출장으로 인한 시간비용을 합한 총 비용으로 봄 - 업무 비효율 비용은 계량적 접근이 가능한 직접적 비용인 국회-행정부처간 출장비와 간접비용인 시간비용의 합으로 계산하였으며, 건축비용, 시설유지비용 등은 국회 본원 설치로 인한 기회비용으로 업무비효율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반영하지 않음





Ⅳ. 분원 설치 추진 전략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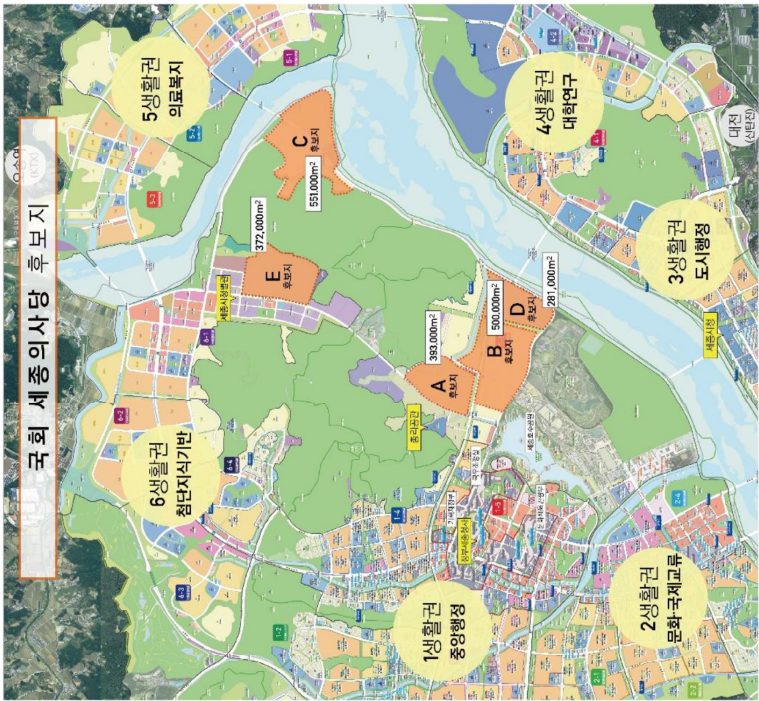
국회분원 입지 검토

|| || || || || IV

분원 설치 추진 전략

기본방향

-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및 효율성 향상 등 다각적 분석을 통한 최적의 입지 대안 선정과 기본 구상 수립
- 국회분원 후보지 3곳 이외에 균형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검토



상징성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 벌어지는 장소로서 민주주의의 상징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입지

접근성

민원인 및 각 부처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 대중교통과 차량의 접근성 고려

업무효율성

행정부처와의 연계 고려

환경성

공원 혹은 수변공간과의 인접성, 인근 부지로 확장 가능성

운영관리 및 방호

방호 공간과 외부공간 확보

2 국회보원 청사 기본구상

|| || || || || IV

분원 설치 추진 전략

■ 입지 대안 분석

- 입지의 상징성, 접근성, 정부청사와의 연계 측면, 환경적 쾌적성을 고려했을 때, B 부지가 국회 분원의 입지로 가장 적절
- 추후 입법타운 형성을 고려했을 때 확장성 면에 있어 B부지의 장점이 큼(A부지 및 주변 대지의 확장성의 장점을 가짐)
- B부지는 5개의 입지 대안 중 대지에 면한 도로가 가장 많아 청사 방호 계획 및 보안, 운영관리계획을 철저히 계획할 필요

구분	상징성		접근성			업무효율성	환경성		기타	
	면적(㎡)	입지상징성	대중교통 접근성	차량 접근성	주변지역과의 연계		환경적 쾌적성	확장 가능성	공간적 형평성 및 도시기능 조화성	운영관리 및 방호
A	393,000	기존 상징성의 연장	버스정류장 신설 필요	출퇴근시간 차량 집중 예상	현재 기준 가장 가까운 상업시설 1km(도보 15분)	국무조정실에서 반경 1km	세종호수공원까지 500m(도보 7분)	인접 대지로 확장 가능성 있음	기존 배후시기지	대지에 면한 도로 2개 (4차선)
B	500,000	기존 상징성의 연장	버스정류장 신설 필요	출퇴근시간 차량 집중 예상	현재 기준 가장 가까운 상업시설 1km(도보 15분)	국무조정실에서 반경 1km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 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	인접 대지로 확장 가능성 높음	기존 배후시기지	대지에 면한 도로 4개 (예정)
C	551,000	도시관문 역할 및 신규 입법타운 형성	대중교통 접근성 미흡	차량 집중 분산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낮음, 현재 기준 가장 가까운 상업시설 5km	국무조정실에서 반경 4.5km	금강변, 친환경 수변공간	인접 대지로 확장 가능성 없음	주변 지역(청주) 및 신규 생활권	대지에 면한 도로 1개 (4차선) 주변에 민간거주지가 없어 일반인의 주변 통행과 민원 소요가 적음
D	281,000	기존 상징성의 연장	버스정류장 신설 필요	출퇴근시간 차량 집중 예상	현재 기준 가장 가까운 상업시설 5km	국무조정실에서 반경 2km	금강 및 국립수목원과 인접	인접대지로 확장 가능성 높음	기존 배후시기지	대지에 면한 도로 2개 (4차선)
E	372,000	도시관문 역할 및 신규 입법타운 형성	대중교통 접근성 미흡	차량 집중 분산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낮음	국무조정실에서 반경 3.1km	-	인접대지로 확장 가능성 높음	주변 지역(KTX) 및 신규 생활권(6-1 생활권)	대지에 면한 도로 1개 (4차선) 대지 동측이 산지

21

부원 설치 추진 전략

함께
KCI
모두
같이
대응

	현재	대안 A1	대안 A2	대안 B1	대안 B2	대안 B3
내용	-	국회 세종 종합회의실 설치	예·결산/국정감사 세종개최를 위한 지원기관(예정처, 사무처 일부) 이전	세종형 상임위(10), 예결위 이전 관련 지원기관(예정처, 임조처, 사무처 일부) 이전	세종형 상임위(14), 예결위 이전 관련 지원기관(예정처, 임조처, 사무처 일부) 이전	상임위(17), 예결위 및 연구기관·지원기관(예정처, 임조처, 사무처 일부) 이전
기능	국정감사 (세종출장)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결산안 심사 업무 현안보고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결산안 심사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결산안 심사 업무 현안보고 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결산안 심사 업무 현안보고 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결산안 심사 업무 현안보고 법률안 심사
	출장	예결위 출장 상임위 출장 사무처 출장	예결위 출장 상임위 출장			
기관	이전		예정처 사무처 일부 (의정기록과 일부)	예결위 상임위(세종형10) 예정처 사무처 일부 (의정기록과) 임조처	예결위 상임위(세종형14) 예정처 사무처 일부 (법제실, 의정기록과) 임조처	예결위 상임위(17) 예정처 사무처 일부 (법제실, 의정기록과) 임조처 미래연구소 도서관
	총연면적	42,002㎡	45,874㎡	122,376㎡	139,188㎡	199,426㎡
규모	예결위	2,553㎡	2,553㎡	2,553㎡	2,553㎡	2,553㎡
	상임위	6,238㎡	6,238㎡	6,238㎡	8,088㎡	10,109㎡
	지원기관	12,210㎡	14,146㎡	52,397㎡	58,953㎡	87,051㎡

4 등사자 정착 방안

부문을 이 전자원의 배아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 이전 직원들을 위한 주택 특별금보
-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을 위한 사택 제공
국회 부원에 근접한 곳에 국회타운 마련
- 게스트하우스 마련
이전 직원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제공
기관별 이전 시 업무 출장자들을 위한 숙박 제공

정주여건을 위한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
직장 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및 제공
- **교육여건 조성 지원**
이전 직원들의 자녀들이 이전에 따른 학업 공백을 없애기 위해 학교 전·입학에 대한 지원, 전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장학금 지급, 학비 용자 지원 등
-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경제적·행정적 지원 방안**
이사비용과 지방이전수당 지급,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 직업알선 지원, 희망·평예퇴직 허용, 공무원, 교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 배우자 우선 전보

한국거래소

- [illegible]

감사합니다



토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



좌장 :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토론

진승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단장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윤수정 공주대학교 교수

토론

진승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단장

안녕하십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진승호입니다.

저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이 주도’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사람”, “공간”, “사람”이라는 3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 전략으로서 지방 중소도시 회생을 위한 도시재생과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03년 참여정부부터 시작된 핵심 균형발전 거점으로서 행복도시와 10개 혁신도시의 내실화와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 차원에서 나온 2002년 신행정수도 구상(‘02.9 대선공약)에서 출발했으며,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03)과 위헌 판결(‘04), 행복도시특별법 제정(‘05)과 행복도시 착공(‘07),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과 정부세종청사 개청(‘12) 등 수많은 논의와 험난한 과정을 거쳐 조성된 도시입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균형발전 정책의 출발점이자 균형발전 의지가 집결된 공간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며, 핵심 국정 과제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국가가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고, 1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세종청사 시대가 열린 이후 지속적인 행정기관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5차례에 걸쳐 총 42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개의 국책연구기관, 4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총 2만 여명이 세종시로 이전하였고, 올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전으로 사실상 행정기관 이전은 마무리되었고, 2021년까지 정부세종청사 건립이 완료되면 정부세종청사도 완성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세종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0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2018년 5월 이후 30만 명으로 급증하였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증가율도 30%를 상회하면서 평균연령 36.8세의 전국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3배, 일자리는 2배 수준으로 늘었고, 대중교통 확충과 어린이집, 문화체육시설, 도시공원 조성 등으로 정주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발전 궤도에 오른 세종시의 도약을 위해서는 마무리 단계인 행정기관 이전에 뒤따르는 발전 전략 모색이 필요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국정 운영 효율화의 관점에서 국회의 세종의사당 설치에 상당한 직접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국회와 행정부 간에 소통 강화를 통한 협력적 관계 유지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권력의 핵심축인 국회 조직을 행정도시에 설치한다는 것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가 있습니다. 독일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회와 행정부는 같은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EU나 독일과 같이 입법부와 집행부가 분리된 경우에도 비효율로 인한 이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회 세종의사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행정기관의 이전시 나타만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주거, 교육 등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설치방안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려요인이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며, 방안이 확정되면 균형위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토론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1. 개 요

- ‘국회사무처의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후속행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사전 준비를 추진 중임.
- 단, 모든 후속 절차는 설치 기능, 규모, 입지 및 사업 주체 등의 사업계획에 대한 국회의 의사결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추진 가능함.
- 본 토론문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주체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가정하고 작성한 것으로 향후 국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2.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 현재 우리청 '19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당초 사업 규모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없이 예산이 우선 반영됨에 따라, 해당 예산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 ① 타당성 재조사¹⁾ : 총사업비가 500억을 초과하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됨. 공공청사에 준하여 타당성 재조사 면제가 가능하며, 면제 시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
- ② 총사업비 협의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여하므로 사업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기획재정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 ③ 수시배정 해소 : '19년 예산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수립'을 사유로 수시배정 지정, 구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예산 반영 전에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됨.

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수시배정 해소 및 예산 집행이 가능함.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예산집행을 위한 모든 사전절차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확정되어야 추진 가능하므로, 후속 절차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함.

3. 주요 추진절차

-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완료되면, 사전기획 용역 및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시행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임.
- 사전기획 용역을 시행하여 건축물 배치와 공간구성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기능과 품질, 디자인이 우수한 국회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기본개념을 도출할 계획.
-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시행하여 공모지침 수립, 심사방식·평가기준 작성,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
- 용역 추진과 별개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에서 결정하는 세종의사당 입지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²⁾ 심의 및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³⁾ 심의 등 필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임.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착수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국회의 의사결정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소요 기간은 설계공모 공고 시점부터 준공까지 약 6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4.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시 종사자 정주여건 지원방안

-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이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2) 「행복도시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행복청장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5조 제3호 가목에 따라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의 부지매입·건축 등에 500억원 이상의 지출을 하는 경우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3) 「국가계약법」 제30조에 따라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방식을 결정하여야 함

-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를 고려한 대중교통 노선 개편, 관사·임대주택 제공 등 이전 종사자의 정주여건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가능

5. 제언

- '19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규모, 기능, 입지, 사업주체 등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의사결정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

토론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 국회 이전은 불가피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행정 도시 건설은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국회 분원 논의도 그런 점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은 대개 두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회 조직이 두 곳으로 분산되면 비효율성이 발생할 것을 우려입니다. 둘째, 개인과 소속 기관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분원을 만들면 국회 자체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 소속된 분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이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를 다시 수도권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생기는 비효율성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면 극복할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행정도시를 만드는 초기에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각 부문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을 꺼내놓고 저울질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보다 국가 전체적인 유·불리, 효율성을 따져야 합니다.

이번 조사도 국회가 행정부 옆으로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확인해줬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공무원과 국회 등에서 세종 분원 관련 취재를 하면서 국회 이전은 불가피한 방향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것을 수치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 비효율, 정책의 질 저하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 조사에서 나타난 수치 이상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 국토연구원이 산출한 효율적 방안 지지

국토연구원은 국회 이전의 선택지로 크게 A와 B,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A는 국회 기능 중 일부를 옮기는 안이고, B는 일부 기관 자체를 옮기는 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옮기는 경우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A는 위헌 가능성이 배제된 안, B는 위헌 검토가 필요한 안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 국회 전체를 옮기는 것을 전제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출장비 측면에서 예결위와 상임위 10개, 예산정책처, 사무처 일부, 입법조사처를 옮기는 B1안이 가장 적다고 추산했습니다. 출장비가 적다는 것은 행정부나 국회 공무원이 그만큼 적게 움직여도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B2안입니다.

저는 국토연구원의 평가대로 우선 B1안이나 B2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세종시의 효율성 문제를 집중 취재해본 결과 행정부의 국회 출장에 따른 비효율성은 출장비만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도 출장비만 지출하면 되는 문제라면 지금 이대로 두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정책 개발의 집중도가 떨어지며, 팀웍 작업이 흐트러지고,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도약하기 전 이견희 회장이 불량 가전제품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 세계일류의 품질을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흠결들이었지만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너무나 다릅니다. 국가 정책의 작은 흠결이 국가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이상입니다. 일단 국토연구원이 제시한대로 B1, B2안으로만 가도 국회 이전이라는 큰 방향이 잡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 국회 전체를 옮기는 방법 찾아야

국회를 옮기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위헌성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개헌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개헌 작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물론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강화하고, 국무총리 추천 방법을 개선하여 장관 추천권을 보장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맞는 헌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행정수도 문제를 함께 해결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문제는 더 이상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정당 간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동안 행정수도는 정치적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선거에서 ‘재미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행정도시가 만들어

진 만큼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합니다.

개헌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개헌이 단기간 내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합니다. 선거 때 행정수도 문제를 함께 투표하는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권 행사 배제’를 문제 삼은 만큼 개헌이 아니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면 ‘성문헌법’이 아닌 ‘관습 헌법’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제대로 된 행정도시 인프라

‘가느냐 마느냐’는 이제 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행정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워싱턴도 처음에는 개흠이었습니다. ‘공직자가 출퇴근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거나 ‘충청권의 블랙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포기할 때가 됐습니다. 행정중심도시로 제대로 역할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효율성을 내세워 국회를 옮기자고 하는 마당에 역지로 만든 비효율성은 당장 제거해야 합니다.

2015년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조사를 보면 76%정도가 교통 시설에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지난해 기획취재를 위해 세종시를 왕래한 기자들은 지리적 거리에 비해 이동 시간이 너무 길다고 불만이었습니다. 행정부와 국회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서울과의 교류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저런 다른 이유로 일부러 불편함을 만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가족동반 이사는 많아졌습니다. 출퇴근을 막는 것은 불편한 교통이 아니라 주거 환경, 교육, 의료, 생활 문화 환경 개선으로, 긍정적인 요인을 활용해 해소해야 합니다. 블랙홀 효과, 주변 지역 동반 발전 문제도 세종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추가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소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서울과 경쟁하는 도시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행정중심도시로, 주변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토론

윤수정

공주대학교 교수

1. 국회분원 설치가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 결정(「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확인 결정)을 비롯한 헌법 재판소 결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확인 결정(2004헌마554 결정)¹⁾에서 수도에 관한 주요내용²⁾

2004헌마554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명시적으로 수도이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도의 이전을 주요내용으로 한다고 보면서,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1)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2)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 한다고 보면서, 이러한 수도의 요건으로 ①수도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입법기능이 수행되는 곳으로서 입법기관의 “직무소재지”라는 점은 수도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며, ②국가의 대표기능 내지 통합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 국민정서상의 상징가치를 가지고 심리적으로 국가통합의 계기를 이루는 것으로 수도성 판단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나아가 ③수도는 정부(좁은 의미의 정부로서 행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의 활동 장소로서 이러한 정부의 기능은 그것이 행사되고 현실화되는 장소에 대하여 수도적인 것의 하나의 계기를 부여하지만, 창조적으로 적극적이어야 할 행정을 담당·수행하는 탓에 그 기구가 전문적이고 방대하여 반드시 한 도시에만 집중하여 소재할 필요는 없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현저한 발전으로 인하여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장소적 이격성을 극복하고 얼마든지 유기적 업무협조를 실현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 그 밖에 ④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적 능력 등은 수도의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³⁾

1) 현재 2004.10.21, 2004헌마554·556 결정, 판례집 16-2(하), 36쪽 이하 참조.

2) 이 부분은 윤수정,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건설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4호(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297-300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3)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수도’란 최소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를 뜻하고,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국회’와 ‘대통령’이 수도 결정에 결정적 요소가 되는 이유는 이들은 대내외 정책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서로 독립하여 국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수행하는 통제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2) 현행 헌법 하에서 국회분원 설치의 위헌성 검토

1) 국회의 헌법적 지위

첫째, 국회는 헌법기관 중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토론과 표결을 통하여 결정하는 합의체의사결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국회의 지위에 상응하여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둘째,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입법기능은 국회의 가장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기능으로, 우리 헌법도 제3장 국회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에 관한 규정 중 가장 먼저 이 점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국회의 입법기능은 국회에게 국정운영과 국가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부여한다.⁴⁾ 셋째, 국회는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은 입법·행정·인사·재정에 걸쳐 이루어지며, 예산안 심의 및 확정 권한은 국회의 통제기능 중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⁵⁾ 또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갖는 포괄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국정감사는 예산의 심의·확정에 선행하는 통제행위로서 국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통제를 행하기 위한 수단이다.⁶⁾

2) 국회분원 설치의 가능성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수도 결정의 결정적 요소가 되는 이유는 국회는 헌법기관 중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으로서, 오늘날 간접민주주의 통치구조 하에서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중요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결정’(헌재결 2005.11.24, 2005헌마579·763(병합), 판례집 17-2, 510-511쪽)에서도 확인된다.

4) 한수용, 「헌법학」(법문사, 2019), 1121쪽 참조.

5) 전광석, 「한국헌법론」(집현재, 2019), 625쪽 참조.

6) 전광석, 앞의 책(주5), 681쪽 참조.

따라서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중요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의 기능 ‘전부’가 분원으로 이전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될 소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서 수행하되, 이를 제외한 다른 기능, 즉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중요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전 혹은 ‘일부’ 이전은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조직의 경우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국회에도 적용시켜 본다면, 국회조직의 경우에도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국회의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기능인 입법기능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초석(礎石), 그리고 사회형성의 도구로써 작용한다.⁷⁾ 우선, 국가의 정치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국민대표의 정치적 의사가 규범화된 형태인 ‘법률’로써 실현된다. 이러한 법률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실현된다.

민주주의 측면에서, 법률은 국가공동체의 모든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의미한다. 법률은 국회의 의사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이로써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국회는 입법을 통하여 다른 국가기관을 지배하고 정치·사회·경제·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 형성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회는 입법을 통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의사형성에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사형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또한, 법률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한다. 법률은 서로 충돌하는 사익과 사익 또는 사익과 공익 사이의 법익형량과 이익조정의 결과로서, 개인의 기본권행사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기본권적 자유의 한계를 확정한다.

법치국가적 측면에서, 행정과 사법은 법률의 구속을 받고, 법률은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의 근거이자 동시에 한계로 기능한다. 법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국민대표들의 동의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며, 법률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것을 요청하는 법률의 일반성 및 추상성은 국민의 평등을 보장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률은 법치국가적 명확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다음으로, 법률은 사회적 과정을 조종하고 유도하는 사회형성의 도구이다. 현대 복지국가는 분배하고 계획하고 끊임없이 실현하는 국가, 사회적 과정을 조종하고 유도하고자 시도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복지국가가 사회·경제적 과정을 조종하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전제로 하며, 국가의 중요한 계획은 법률의 형식에 의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운영에 필수적인 국회의 입법기능은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더욱더 전문적이고 방대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현저한 발전으로 인하여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장소적 이격성(離隔性)을 극복하고 얼마든지 유기적 업무협

7) 한수용, 앞의 책(주4), 1122쪽 참조.

조를 실현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국회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정부의 소재지는 대통령의 소재지로서 대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의 소재지를 수도의 특징적 요소로 보는 한 정부 각 부처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한다면, **국회의 수반은 국회의장이므로 정부 대부분의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현재의 상황에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조직이 분산배치되더라도 국회의 소재지는 국회의장의 소재지로 대표된다고 볼 수도 있다.**

정리하자면, 현행 헌법 하에서 국회분원 설치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확인 결정에 근거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①**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여전히 국회의 소재지인 서울에서 수행하되, 이를 제외한 다른 기능, 즉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중요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전 혹은 ‘일부’ 이전이 되어야 하며, ②국회의 소재지로 대표되는 국회의장의 소재지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2. 국회분원의 개념 및 기능

(1)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분원(分院)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분원 설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분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즉 분원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분원(分院)의 사전적 의미는 본원(本院)에서 따로 나누어 설치한 하부 기관을 뜻한다.⁸⁾ 반면, 기관에서의 본원(本院)은 분원에 상대하여 으뜸이 되는 곳, 즉 기관의 장(長)이 머무르는 곳(인적 범위), 그 기관의 본질적인 업무(물적 범위)를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분원이 설치될 경우, 국회본원(서울)은 국회의장이 머무르는 곳, 그리고 국회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될 것이며, 국회분원(세종)은 국회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업무가 수행되거나 또는 본질적인 업무라고 할지라도 본원과 동시에 수행될 수 있으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헌법상 허용되는 국회분원(세종)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1)국회의 본질적 혹은 중추적 기능을 제외한 기타의 업무이거나 2)국회의 본질적 혹은 중추적 기능이라 할지라도 본원과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업무가 될 것이다.**

8) 표준국어대사전<<https://ko.dict.naver.com/#/entry/koko/9a9422ab65854780a0ed5ee87f94d534>, 최종방문일 2019.7.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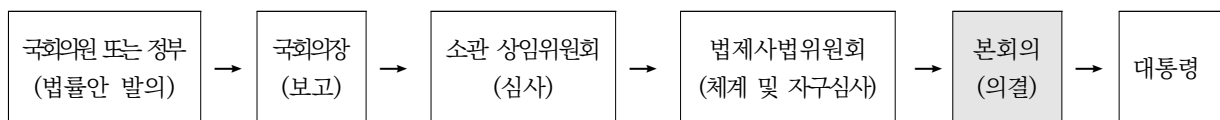
(2) 국회의 본질적 · 중추적 기능의 범위

헌법상 허용되는 국회분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국회의 본질적 혹은 중추적 기능이 주요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가 수도 결정의 결정적 요소인 이유는 국회는 헌법기관 중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으로서, 오늘날 간접민주주의 통치구조 하에서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하고(국회의원) 중요한 국가의사를 결정(법률과 재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 여러 기능들, 즉 입법기능, 재정기능,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회의 인사권 및 인사통제기능 중 입법기능과 재정기능이 국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법률에 기속된다. 따라서 행정부의 기본적인 기능이 국가정책의 수행이고 그 결과 어느 정도 국가의 기본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다.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역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발해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입법과 관련하여 헌법 제52조에서 정부에게 법률안제출권만을 부여하고 있어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든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입법기능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⁹⁾ 그리고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 과제 역시 증가하였고, 이러한 국가의 과제를 이행하는 두 가지 중요한 도구가 ‘재정’과 ‘법률’이다.

먼저, ‘법률’과 관련된 국회의 입법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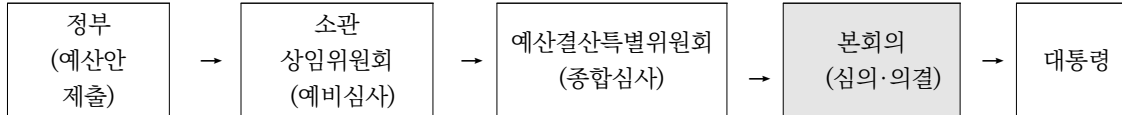


입법절차에서 중 국회에서의 최종단계는 본회의의 의결절차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가 수도 결정에서의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의결의 필수적인 요소인 국회의장과 본회의장이 국회본원(서울)에 존치하여 국회에서의 최종단계인 의결절차가 국회본원(서울)에서 이루어진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 등이 국회분원(세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되는 국회분원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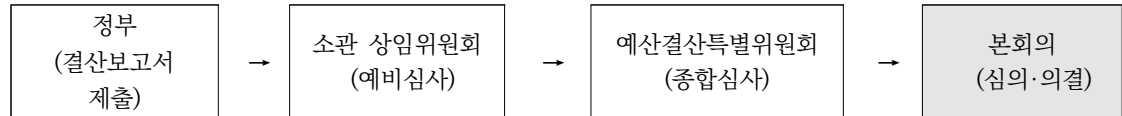
9) 현재 2005.11.24, 2005헌마579·763(병합) 결정, 판례집 17-2, 513-514쪽 참조.

다음으로, ‘재정’과 관련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예산과정) 및 결산심사(결산과정)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산과정



2) 결산과정



‘재정’과 관련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절차 및 결산절차에서 국회의 최종적인 단계는 정부의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모두 거친 후 이를 확정하는 본회의의 의결절차라고 할 수 있다. 입법절차와 마찬가지로, 의결절차에서 필수적 요소인 국회의장과 본회의장이 국회본원(서울)에 존치하여 국회에서 최종단계인 의결절차가 국회본원(서울)에서 이루어진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국회본원(세종)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헌법상 허용되는 국회본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설치되는 국회분원(分院)의 최소한 요건은 1)국회의 수반(首班)인 국회의장이 국회본원(서울)에 소재하고, 2)국회의 여러 기능들 중 본질적·중추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기능 및 재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회의 절차 중 최종 단계인 본회의에서의 의결절차는 국회본원(서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전 단계에서의 위원회 활동 등이 국회분원(세종)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헌법상 허용되는 국회본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서 실질적인 심의 및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중점을 둔다면, 상임위원회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이 국회분원으로 이전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실행정수도 특별법 위헌확인 결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3. 국회 분원에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당수의 위원회가 포함될 경우 위헌성 여부

(1) ‘국회의원 전체에 의한 대의(代議)의 원칙’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다른 헌법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自律權)을 갖는다. 즉 국회의 자율권은 자신을 스스로 조직하고 헌법상 부여받은 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로 내부질서를 형성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회는 자신의 자율권에 근거하여 헌법상 부여받은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조직하여야 한다.

국회의 자율권은 의회주의¹⁰⁾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대 헌법국가의 의회에서는 당연한 국회기능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국회의 자율기능은 국회가 갖는 입법·재정·통제·인사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을 뜻하기 때문이다.¹¹⁾

이러한 국회의 자율권은, 의사절차·회의운영·의사결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자율권, 집회·휴회·폐회·회기 등 집회의 여부와 방법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집회자율권, 내부의 조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직자율권, 의사절차와 내부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인 규칙제정권, 국회나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질서자율권,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 등 의원의 신분에 관한 신분자율권 등을 포괄한다. 그 중에서도 규칙제정권은 국회자율권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자 핵심적 요소이다.¹²⁾

우리 헌법도 제64조 제1항에서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의사절차와 내부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인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러한 명시적인 규칙제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회 내부의 조직과 의사절차는 ‘국회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다른 한편, 국회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대의기관이다. 국회 구성원이 전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는 점에서, 국회는 헌법기관 중에서 대의제의 이념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된 국가기관, 국민대표성이 가장 강한 헌법기관이다. 국회는 국민전체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원은 그 전체로서 국민의 대의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한다. 국회에 의한 대의과정에서 근본적인 것은, 국회가 그 전체로서 국민전체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이다. 따

10) 의회주의(議會主義)란 주권적 정당성의 원천인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합의기관인 의회가 국가 의사결정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말한다(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19), 386쪽 참조).

11) 현재 2003.10.30., 2002헌라1 결정, 판례집 15-2(하), 31-32쪽 참조.

12) 한수웅, “국회법의 헌법적 지침과 한계”, 「헌법논총」 제29집(헌법재판소, 2018), 291쪽 참조.

라서 ‘국회에 의한 국민의 대의’란 ‘국회의원 전체에 의한 국민 전체의 대의’를 의미한다. 상이한 이익과 견해를 가진 국민의 다양성을 국회의 의사형성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체로서의 국회만의 국민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 전체로서의 국회만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만 국회의 결정이 민주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국회의원 전체에 의한 대의(代議)의 원칙’은 국회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이로부터 ‘국회의 구속력 있는 결정은 선출된 국회의원 전체로 구성되고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는 요청이 나온다.

(2) 국회 위원회 제도의 의의와 기능에 비추어 본 위원회 이전의 위헌성 여부

1) 위원회 제도의 의의와 기능

위원회는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안된 국회의 조직원칙이다. 즉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를 포함한 위원회는 의원 가운데서 소수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기관이다.¹³⁾ 위원회는 이러한 기능뿐만 아니라 대정부 통제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능 때문에 헌법은 국회뿐만 아니라 위원회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의안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2조). 또한 상임위원회의 분류가 통상적으로 행정각부의 분류에 따르는 것도 바로 전문성 있는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각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보다 잘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의회는 ‘발언의 장소’로서 본회의와 ‘실질적 작업의 장소’로서 위원회로 나뉘어 기능한다.¹⁴⁾ 본회의에서의 공개적인 논의는 사안에 관한 정당의 입장을 서술하고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기여하는 반면, 사안에 관한 실질적 논의는 심의대상의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 때문에 본회의에 앞서 소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섭단체 내부의 소위원회나 국회의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우리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와 ‘본회의 결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위원회제도는 국회가 심의해야 할 의안의 양적 증대와 질적 전문화, 국회의안처리에 대한 효율성의 요청 등을 이유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국회를 의안심사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의회주의의 회복에 기여하는 기능을 갖는다.¹⁵⁾ 반면, 위원회제도가 잘못 운용될 경우에는 이익단체의 로비활동을 용이하게

13) 현재 2003.10.30, 2002헌라1 결정, 판례집 15-2(하), 29-30쪽 참조.

14) 한수용, 앞의 책(주4), 1127쪽 참조.

함으로써 의안처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며, 위원회가 소관사무와 관계되는 행정부서와 밀착되어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다.

2) 위원회의 업무를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오늘날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민대표로 구성된 국회의원 전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나, 국회의원 전원이 장기간(長期間)의 회기 동안 고도의 기술적이고 복잡다양한 내용의 방대한 안건을 다루기에는 능력과 시간상의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제도가 창설된 것이다. 오늘날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과제를 이행하기 때문에 위원회 작업에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이 부여되기도 한다. 예컨대, 법안처리, 정보의 요청, 국정통제, 국정조사 등 국회기능의 본질적인 부분이 위원회에 의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그렇다면 국회의 의사형성이 사실상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창설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만든 내부조직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제53조 제1항) 및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헌법 제54조 제1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헌법 제53조 제2항)라고 하여 법률안 의결 및 예산안의 심의·확정의 주체를 위원회가 아닌 “국회”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에서 “위원회”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조항은 헌법 제62조로, 제1항에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항에서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와 위원회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헌법에서 ‘국회’라 함은 일반적으로 본회의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국회에 관한 헌법 제3장(제40조에서부터 제65조까지)의 조문들이 모두 국회의 본회의에 대한 규정임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종류·직무·소관·정수·위원의 임기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은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하여 국회 내부의 조직과 의사절차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규범이므로 이 역시 헌법의 구속을 받는다.

이렇듯, 국회에서 위원회는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그 소관에 속하는 법률안 등 의안을 심

15) 허영, 「한국헌법론」(박영사, 2019), 957쪽 참조.

사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의안으로 입안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 뿐,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설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을 본회의에서는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법률안의 확정 및 예산안의 확정과 결산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의 의결이 필수적이며 최종적인 단계라고 할 것이다.

국회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회의의 준비 작업을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본회의의 결정권한은 헌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위원회 등에 위임되어서는 안 되고, 구속력 있는 결정은 본회의에 유보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국회에 관한 규정은 모두 본회의와 관련된 규정이라는 점, 헌법 제62조에서 ‘국회’와 ‘위원회’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의 결정만이 국회의원이 대변하는 국민의 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서울)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고, 국회의 실질적인 활동이 위원회(세종)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본회의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며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므로, 위원회의 활동 등을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실질적인 국회활동이라고 보더라도 ‘본회의 결정주의’를 감안한다면, 위원회의 활동과 본회의에서의 의결절차가 모두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헌법상 허용되는 국회분원 업무의 범위에는 국회의 본질적 혹은 중추적 기능이라 할지라도 본원과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본질적 혹은 중추적 기능의 일부 이전 혹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업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원회의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회분원(세종)으로 이전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서 실질적인 심의 및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중점을 두어, 위원회 활동만을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역할로 파악하고 본회의에서의 의결을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이 국회 분원으로 이전될 경우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확인 결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3) 기타 국회 소속기관의 이전에 대한 위헌성 여부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제21조), 국회의 도서 및 입법 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도서관(제22조), 국가의 예산 결산·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 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제22조의2),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입법조사처(제22조의3) 등을 두고 국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의해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미래연구원(제1조)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소속기관의 경우,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국회의원, 입법 및 재정 기능)에 비추어 보조 및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이 국회분원(세종)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헌법에 위배될 여지는 없어 보이며, 이들의 이전은 입법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4. 환경변화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 가능성

(1) 헌법이론에 따른 헌법적 견해의 변경가능성

‘관습헌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킨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이론적으로 혹은 헌법정책적으로도 비판적 견해가 다수를 이루며, 헌법재판소 역시 이 결정 이후에는 다른 어떠한 결정에서도 ‘관습헌법’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특히, 수도는 국가의 정체성(政體性)을 표현하는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제정만으로 현재의 수도를 변경하고자 하였음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에 대해서도, 수도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 국민의 기본권 보장 또는 국가공동체의 실현 및 유지 등의 헌법 개념(혹은 기능)과의 관련성이 있거나 국가정체성을 표현하는 헌법사항이 될 수 없으며, 법률로 규율되어야 하는 입법사항이라고 보는 견해¹⁶⁾가 다수 존재한다.

(2) 정치적·사회적 상황의 변경에 따른 헌법적 견해의 변경가능성

2004년과는 달리(특히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결정은 ‘정치의 사법화’의 부정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한다), 행정부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된 상황, 그리고 현재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에서는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초래된다면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16)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윤수정, 앞의 논문(주2), 300-303쪽 등 참조.

5.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법 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49)17)과 같이,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분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둔과 동시에 국회 분원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일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기관에게 내부 규칙제정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내부질서의 규율형식으로서 ‘규칙’이 ‘법률’보다 헌법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제이행을 위한 절차를 형성함에 있어서 유연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고에 기인한다.¹⁸⁾ 이러한 사고에 바탕을 두고 우리 헌법도 헌법기관인 국회에게 규칙제정권을 부여하여 의사절차와 내부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률이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일차적인 규율형식으로 법률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즉 헌법 제64조 제1항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국회의 내부질서에 관한 1차적인 규율형식은 법률이고 규칙은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차적인 규율형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²⁰⁾ 이러한 헌법 해석은 1948년 제헌 헌법에서 국회의 자율권(의사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국회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던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그러므로 헌법 제64조 제1항은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은 법률과 규칙으로 정한다”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회분원을 물리적 시설의 분화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규칙’만으로도 분원의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국회의 기능적 분화, 특히 상당수의 상임위원회가 이전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민의 의사(意思)를 투명하게 반영해야 할 의사(議事)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비롯한 대의민주주의적 측면에서도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²¹⁾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길이 될 것이다.

17) 국회법 개정안 제22조의4(국회 분원)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그 분원(分院)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18) 한수웅, 앞의 책(주4), 1198쪽 참조.

19) 헌법 제64조 제1항의 해석상 ‘규칙’과 저촉될 수 있는 ‘법률’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규율하는 법률일 것이므로, 여기에서의 ‘법률’은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0) 같은 견해로는 한수웅, 앞의 책(주4), 1198쪽 참조.

21) 국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도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발행일 : 2020년 6월

발행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발행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